

第211回國會
(閉會中)

國防委員會會議錄 第1號

國會事務處

日時 2000年5月17日(水)
場所 國防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국방현안보고

審査된案件

1. 국방현안보고 2面

(14시21분 개의)

○委員長 韓英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방위원회를 소집을 해 놓고 위원님들께서 모두 참석해 주실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위원장 으로서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관심이 우리 국회에 쏠려있고 또 국방위원회에 쏠려 있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우리 군을 걱정하고 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위원회에 출석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러 위원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무기도입과정의 로비 의혹 등 여러 가지 국방현안사항이 대두되고 있고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확인함으로써 국민적인 의혹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제15대 국회를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국방현안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3당 간사간의 합의에 의해서 오늘 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방위원회에서는 우리 군이 전력증강을 위한 방위력개선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고 특히 방위력개선사업 중 96년도에 착수해서 계속 추진해 온 백두·금강사업과 동부전선 전자전장비 등을 포함한 8개 사업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5대 후반기인 98년도 국정감사에서 이 백두·금강사업에 대한 기종의 선정과 가격, 성능 등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또 의혹과 오해 이런 것이 제기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난 98년도에 이 백두사업

에 대한 국정감사를 할 적에 예정은 하루로 끝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설명을 당국자가 하지 못함으로써 하루 더 늘려 잡아서 이틀간 국정감사를 했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두 차례에 걸쳐서 한 백두·금강사업에 대한 국정감사의 결과도 시원한 내용을 얻지 못해서 국방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소위원회를 열 번이나 비공개리에 했던 것을 기억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국방위원회에서는 백두·금강사업에 대한 계약에서부터 진행과정 또 내용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충분히 소위원회에서 검토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최근에 로비활동과 관련되어서 불미스러운 내용이 세간에 알려짐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국방에 대해서, 전력증강사업에 대해서 의혹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로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국방부가, 정부가 전력증강사업을 추진할 적에는 사전에 국회 국방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듣고 여러분이 의심나는 것을 기탄없이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위원회의 운영은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에 위원 여러분들이 한 가지도 빼놓지 말고 국민이 알고 싶어하고 국민이 의혹을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전부 다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황보고를 받는 데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100% 공개회의로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를 먼저 받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立法調査官 柳世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委員長 韓英洙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시고 또 3성장군으로 국가에 헌신을 하시다가 국회에 들어온 이후에 이번 15대 국회에서는 우리 국방위원회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오래도록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지난 4월19일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金復東 위원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례는 국회장으로 모셨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은 이미 다 명복을 충분히 벌어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장례식에 미처 참여하지 못하신 분도 계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고 金復東 위원의 명복을 비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합니다.

장내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국방부 관계자들도 같이 기립을 하셔서 묵념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인이 되신 金復東 위원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묵념.

(일동묵념)

바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아까 입법조사관의 보고대로 오늘 한나라당의 李信範 위원이 우리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어 오셨습니다. 먼저 李信範 위원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信範委員 예, 인사올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 국방현안보고

(14시30분)

○委員長 韓英洙 의사일정 제1항 국방현안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해 주실 것은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이 있습니다. 趙成台 국방부장관이 우리 국방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는 러시아와 일본 방문을 위한 일정관계로 출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방부차관께서 趙成台 국방부장관을 대신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차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防部次官 朴庸玉 국방부차관입니다.

금일 국방위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관의 러시아, 일본 공식방문관계로 부득이 차관인 제가 대신 참석하여 인사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국방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다가오는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또 6·25전쟁 50주년이라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전장병이 일치단결한 가운데 어떠한 국가적 위기에도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튼튼한 국방대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에 대비하여 한·미위기관리 및 연합군사대비태세를 긴밀하게 유지하는 등 군본연의 기본임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백두사업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98년도 국정감사와 99년도 방위력개전사업심사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던 사안입니다마는 또 다시 위원님 여러분께 많은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방부에서는 무기체계획득관리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또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많은 제도 개선과 전문인력육성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좋은 고견을 내어주시면 정책결정시 참고하도록 하여 더욱더 신뢰받는 국방업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국방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매항리 미군사격장과 충북 영동의 군폐기시설 등을 포함한 주요현안에 대하여서는 정책기획국장인 車榮九 육군소장이 먼저 보고드리고 이어서 백두사업 등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백두사업단장 梁致奎 육군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새로 보직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국방부 정보참모본부장 洪淳昊 육군중장입니다.

인사복지국장 金承烈 육군소장입니다.

법무관리관 金鎭燮 육군준장입니다.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 案秉漢 육군소장입니다.

군사정보부장 朴勝樞 육군소장입니다.

전발보안부장 朴春淳 군무1급입니다.

(간부인사)

대단히 감사합니다.

○國防部政策企劃局長 車榮九 국방부 정책기획국장 車榮九 육군소장입니다.

국방분야 주요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최근 북한동향으로부터 주요현안 그리고 결언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최근 북한동향 중 일반 정세입니다.

북한은 최근 정치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강성대국 건설의 기치를 내걸고 군부 위주의 통치체제를 구축하여 불만세력에 의한 체제도전을 억제하고 국가 운영 정상화를 위해 기구를 통·폐합하고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당 기능의 점진적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제상황은 국제사회의 지원과 남북 경협자금 유입으로 다소 호전되었으며 2002년을 경제 정상화 목표년도로 설정하고 경제 회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경제적 실리획득을 위해 실리중시 외교노선으로 전환하여 다수 국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체제보장과 경제실리 획득을 위해 미국 일본과도 관계개선에 노력하고 있고 중국 러시아 관계의 복원노력도 적극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4월10일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한 이후 정상회담 합의 사실을 집중 보도하고 김정일은 군대의 사기 고양활동에 주력하면서 대남 비방방송을 급격히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사적으로는 전략무기 위협을 유지하고 노후전력을 지속 보장하기 위하여 전·후방지역에 미사일갱도진지 공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장사정포와 소형잠수함을 증강 배치하고 99년7월 도입한 MIG-21 전투기를 조립후 금년 4월에 작전배치하였습니다.

한편 연평해전 이후에는 전투기량 향상에 주력하

여 해안포, 함포 등 사격훈련을 중점 실시하고 전군 전투준비태세 검열과 전투장비 일제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서해 접적지역 훈련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까지 실시한 금년도 동계훈련은 지상군과 해군 훈련은 저조하였고 공군 비행훈련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서해 접적지역은 일상적인 경비활동만 하였습니다.

4월 이후 훈련활동이 저조한 가운데 소 부대 위주의 관정검열을 실시하는 등 군사 도발준비와 직결된 특이 동향은 포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현안 중 군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5월9일 일부 언론에서 군 당국이 극비리에 화학무기를 충북 영동지역에 폐기하고 있어서 주민 안전과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내용과 함께 환경파괴의 위험성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면서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는 입장 발표를 통해 정부는 97년4월 화학무기금지협약에 가입하여 의무를 이행 중이며 화학무기 관련문제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기관과 부서에 그동안의 경과 및 안전성을 설명하였고 5월15일에는 민간단체와 관련기관 대표들이 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방문한 결과 안전성과 환경오염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방부는 군 폐기시설 운영시 안전성과 환경오염 방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으며 시설가동간 전문가에 의한 환경성 평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한국 기계연구원의 성능평가 결과 배출가스 농도가 환경기준치의 4분의 1 내지 4,000분의 1 수준으로 전혀 문제점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혀 드립니다.

다음은 매항리 미 공군사격장 민원 관련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항리 사격장은 1955년2월에 미 공군 폭격연습장으로 공여되어 지금까지 미 공군이 관리해 오고 있는 사격장으로 설치 당시에는 주변에 민가가 거의 없었으나 그 이후 주민이 점차 증가하였고 88년 이후 사격장 이전 또는 주민이주 요구와 소음피해 배상청구 등이 제기되기 시작했으며 지난 8일 엔진고장을 일으킨 미

공군기의 농섬 일대 폭탄투하로 주민 피해발생 주장이 나오면서 여론화 되었습니다.

사격장 현장은 우측 요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상에 위치한 농섬 일대에서는 폭탄 투하훈련을 하고 육지 고온리 사격장에는 기총 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는 지역은 붉은 색으로 표시한 사격 안전권에 인접한 매향 1리, 5리이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지역은 녹색으로 표시한 지역으로 사격 안전권과 이격된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민원사례는 크게 사격장이나 주민 이전 요구와 소음피해 배상관련 소송제기 내용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사격장 이전 또는 주민 이주 요구는 사격장 안전권에 인접해 있는 매향 1리와 5리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난 88년 소음피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초로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농수산부와 협조하여 계획된 우정간척지로 사격장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간척사업이 순연됨에 따라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이후 96년10월에는 매향리 712세대가 국회에 청원을 제출하였으며 97년1월에 주민을 이주시키기로 국방부와 경기도 지역주민간에 합의하였고 국방부에서는 중기계획에 설계조사비 2억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98년에 일부 주민이 이주를 반대하여 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에 매향 1리와 5리 주민대표들이 이주 문제 협의를 요구해서 현재 이주 대책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음피해 배상과 관련해서는 미군을 대상으로 한 배상신청은 작년 7월에 기각되었으나 소음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계류중으로 내일 증거로 채택된 KBS 추적 60분 테이프 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5월8일 엔진고장 미 공군기의 폭탄투하를 계기로 주민들은 피해조사와 결과에 따른 배상, 사격장을 이전하든지 주민을 이주시키든지 등 근본대책을 조속히 강구해 줄 것과 소음피해 관련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5월8일 이후 관계관과 지역부대장 그리고 미 7공군 법무관 등이 현지를 방문 조사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한·미간에는 피해 합동조사 완료시까지 사격을 당분간 중지하고 한·미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민원해소 방안은 5월8일 피해는 한·미간 합동조

사반을 운용하여 확인과 배상신청을 지원해 줄 수 있으나 사격장 이전은 적절한 지역확보가 곤란하고 이전도 장기간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실행이 곤란합니다.

주민이주는 이주대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중기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가능하며 소음피해배상은 재판결과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국방부는 한·미 합동 현지조사를 5월18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고 주민이주는 매향 1리와 5리의 이주 반대주민이 현재 32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설득하여 추진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사격안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석천리 주민 등과도 협의 후 이주를 추진할 계획이며 주민 안전과 소음 최소화를 위한 미군의 훈련방법을 미측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주민의 어려움을 감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 정상회담 관련 국방분야 대비입니다.

군은 무엇보다도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군 본연의 국방기본임무에 충실하면서 긴밀한 한·미 위기관리 및 연합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훈련은 기 계획대로 실시하되 홍보는 유의하겠으며 우발적 충돌로 인한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사외교 활동을 통해 주변국의 지원 획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군의 대북 심리전도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전개하고 김정일과 북한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자제되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북한의 반응에 따라 신축성 있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장병들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개최는 확고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일관된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대한 신뢰의 결과임을 교육하는 한편 확고한 대적관을 확립시켜 안보의식이 헤이됨을 방지하고 군 본연의 자세를 유지할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방장관 러시아·일본 방문 관련사항으로 러시아 방문은 최근 북·러 관계의 긴밀화 움직임과 관련하여 한·러 군사관계를 강화하고 푸틴 대통령 취임 이후 러시아의 신내각과 군사적인 신뢰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한반도 안보와 관련하여 양국간 전략적 공통 이해를 합의할 예정이며 한·러간 실천가능한 교류·협력방안에 대해 양국 국방부장관간 협의를 도출하여 작년 5월 양국 정상

합의한 21세기를 향한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군사외교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일본 방문은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한·일간의 정책적 공조를 강화하고 양국간 실질적인 군사교류와 협력 증진방안을 협의하며 한반도 안보관련 일본의 긍정적 역할을 유도하는 등 98년10월, 한·일 양국 정상에 합의한 21세기를 향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발전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주변 4개국과 국방장관 회담을 연례적으로 실시하여 우리 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계획입니다.

기념사업은 6·25전쟁이 세계의 적화를 저지한 자유수호전쟁이라는 의의와 교훈을 계승하고 산화한 호국영령을 추모하며 참전용사 가족의 명예를 선양하는 한편 참전국과의 유대강화와 국가 신인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국무총리의 통제하에 국방부 주관으로 금년 6월25일부터 3년간 국·내외의 참전용사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적 행사로 추진하여 대외적으로는 민주화되고 성숙한 한국상을 홍보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대통령이 임석하시는 6·25전쟁 50주년 중앙 기념행사와 주요전투 기념행사, 6·25전쟁 상징조형물 건립, 기타 참전용사 복지시책 개선과 명예선양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군은 정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전환기적 안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투임무 위주의 정예강군 육성에 매진함으로써 국가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강력한 국방태세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현안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백두사업 추진현황을 백두사업단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韓英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두사업에 관해서 梁致奎 장군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防部白頭事業團長 梁致奎 국방부 백두사업단장 육군준장 梁致奎입니다.

지금부터 백두사업 및 기타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백두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개요로부터 사업 추진경과, 최근 언론보도내용순이며 이어서 기타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니다.

다음 쪽입니다.

백두사업은 북한 전지역의 신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96년부터 2003년간 2억3,000만불을 투자하여 공중신호정보 수집체계를 획득하는 사업으로 대금 지불은 금년 4월말 현재 계획에 따라 총 계약액의 76%인 1억7,700만불이 지불되었습니다.

공중수집부대는 ○○부대 예하에 창설 운용할 예정이며 비행대대는 공군 ○○비행단 예하에 창설 운용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백두사업은 해외 직구매 방식으로 계약하였으나 현존장비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작전요구성능에 맞도록 주문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이후 시스템 설계, 주장비 제작 및 시험, 항공기 인도 및 개조, 시스템 체계의 결합을 완료한 후 미 현지 및 국내의 수락시험을 거쳐 시스템을 인수하는 등 복잡한 개발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추진경과를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6월 무기체계를 선정하고 동년 9월에 해외구매로 획득방법을 결정한 후 91년9월부터 92년4월까지 주장비는 수요부대에서, 항공기는 공군에서 각각 시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주장비 4개 및 항공기 3개 대상기종 모두 군요구성능을 충족하였으며 항공기 우선순위는 CITATION-III, FALCON-50, HAWKER-800순이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러나 주장비와 항공기가 각각 분리평가됨에 따라 백두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체계결합 후 ROC 충족 여부 판단이 곤란하였기 때문에 93년6월 합참은 시험평가 결과 판정을 유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합참은 94년9월, 백두사업 시험평가 추진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즉, 탑재장비와 항공기 분리추진시는 체계결합 및 결합 후 성능발휘, 향후 사업관리의 문제점 대두가 예상되고 체계결합 가지수가 과다하여 시험평가 및 협상추진이 곤란하며 항공기 시험평가는 장비 탑재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장비 회사가 항공기를 선택, 주장비와 체계결합한 상태에서의 제안서를 제출받아 시험평가를 실시하여 통합구매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94년9월, 국방부는 확대획득심의회를 통해 주장비와 항공기의 통합구매방식을 결정하였으

며 95년1월, 백두/금강 특별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탑재장비를 주계약 업체로 패키지화하고 기종결정은 1단계로 미국장비 3개 중 1개를 우선 선정한 후 2단계로 미국장비와 제3국 장비를 경쟁시켜 기종을 결정하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별규정에 의거 국방부는 95년6월, 3개의 미국 장비 중 1개 기종선정을 획득심의회를 통하여 주장비 성능과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한 E-SYSTEM사/HAWKER-800체계로 결정, 제3국 장비와 경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95년10월에는 미국 및 불란서, 이스라엘 장비를 대상으로 시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3개사 체계 공히 군요구성능을 충족하였으며 미국 E-SYSTEM사/HAWKER-800체계가 다소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96년6월20일과 21일, 기종결정을 위한 획득심의회 및 확대획득심의회를 통하여 E-SYSTEM사/HAWKER-800체계가 가격은 고가이나 한·미 연동운용 및 제3국 장비 결정시 추가비용 발생 등이 고려되어 결정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96년6월29일 미 정부와 FMS LOA 계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약후 성능상의 문제제기에 대한 조치경과입니다.

97년6월 체계규격서 검토를 위한 한·미간 예비설계회의시 수요부대에서 체계규격서 검토결과 군요구성능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97년11월8일 국방차관은 정보본부장 책임하에 사업의 중간평가를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97년11월10일 정보본부는 한·미 사업관계관 확대회의를 실시한 결과 백두체계는 현 주한 미군자산과 대등한 성능발휘가 가능하며 미국방성 FMS절차에 의거 미정부가 성능을 보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97년11월21일 정보본부는 한·미 협의결과 및 자체 중간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즉 백두사업은 FMS사업이므로 미정부를 신뢰하고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군요구성능 미흡사항은 주한 미군 정보자산과 비교시 충족이 예상된다는 내용이었으며 한·미 협의하 계획된 사업의 적극 추진이 요망된다는 장관지시를 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민의 정부 후 사업전반 재검토 조치경과입니다.

다.

98년5월 장비성능 등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방부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의 계속 추진은 불가피하나 군요구성능 미충족문제 등을 재검토한 후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 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또한 98년6월부터 8월까지 감사원 감사를 수감한 결과 모든 문제점을 전면 재검토한 후 계속 추진여부 결정 등 종합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98년8월부터 9월간 군요구성능 충족 여부 판단에 중점을 두고 특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장비성능 분야는 수요부대와 국과연, KIDA 등 박사급 전문인력을 포함 총 28명이, 계약분야는 조달본부 외자부장 외 5명으로 평가팀을 구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업중단시에는 자주정보 및 전력 건설이 불가능하고 약 1억3,000만불의 배상이 불가피하며 군요구성능 자체는 큰 문제는 없으나 ROC 충족 여부 판단을 위한 시험평가조건이 미비한 12개 항목을 체계규격서에 반영토록 미측에 요구하고 미관철시에는 정책회의를 통해 사업추진방향을 결정하며 사업 계속 추진 시에는 사업단 및 사업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별평가결과에 따라 98년10월29일, 30일 양일간 장비성능 12개 문제항목에 대한 한·미 기술평가관회의를 실시한 결과 한반도 작전환경, 임무수행 가능성, 현 기술수준 및 기계적 특성 등을 고려 6개항은 미측 의견을 수렴하였고 6개항은 한측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98년11월 정보본부는 군사정보위원회를 통해 한·미간 협의결과를 검토한 결과 협의결과가 반영된 체계규격서에 의거 장비 제작시 정보수집, 임무수행이 가능하며 사업 계속 추진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이후 98년12월말 획득협의회에서 사업 계속 추진을 결정하였으며 99년1월29일 백두사업단을 창설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 내용입니다.

고가의 미국 장비구매와 관련하여 미국, 불란서, 이스라엘 3개국 장비 중 미국장비가 가장 비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장비가 가장 나쁜 평가를 받은 장비는 아닙니다.

추진경과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5년10월 시

협평가 결과 3개국 장비 모두 “전투용 사용자”였으며 미국장비 성능이 다소 우수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정보본부 및 수요부대에서 한·미간 정보공조체제 유지 측면과 백두체제는 첨단기술로 제작되어 체계결합됨을 고려하여 미정부가 성능을 보장하는 FMS방식으로 추진이 요구되며 제3국 장비 선택시 별도의 체계구축 등 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될 것이라는 의견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가격이 비쌌지만 미국장비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비성능 미흡 관련 여부입니다.

장비성능 기준미달과 관련하여 사업추진간 군 실무진에서 장비성능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여 98년 8월에서 9월까지 국방부 자체 특별평가를 실시한 결과 12개 문제 항목에 대하여 미측과 협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8년10월말 한·미 기술평가관회의를 실시하였고 12개 문제항목 중 6개 항목은 한측 요구대로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6개 항목은 미측에서 제시자료의 타당성을 인정, 미측 의견을 수용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즉 한·미 기술평가관회의를 통하여 요구성능에 못 미치는 장비가 아닌 달성 불가능한 요구조건을 현실성 있게 재조정된 것입니다. 성능은 임무수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장비제작 완료 후 미 현지와 국내에서 두 차례의 수락시험을 통하여 체계 성능 및 기능을 명확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가장 나쁜 평가를 받은 항공기 선정 관련 내용입니다.

92년4월 백두체제와 관련된 기본 항공기에 대하여 공군 주관하에 시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3개 기종이 모두 “전투용 사용자”였고 우선순위는 CITATION-III, FALCON-50, HAWKER-800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험평가는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인 탑재장비의 특성 및 체계결합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항공기만의 평가였습니다. HAWKER-800항공기는 95년1월 주장비와 항공기를 패키지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후에 5개의 탑재장비회사 중 3개 회사가 선택하였으며 체계결합 및 성능발휘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린다 김 로비의혹 관련 사항으로 린다 김 관련

사건 취급 경과입니다.

96년3월 육군이 전자전 장비 확보사업과 관련하여 린다 김이 이스라엘장비 지원을 위한 로비침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실시한 결과 해외시험평가관들이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접대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장관 지시로 관련자를 조사하여 5명을 징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97년2월에는 린다 김이 백두사업과 관련하여 군 고위직을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 97년4월과 7월 2차에 걸쳐 린다 김을 요주의인물로 지목하여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장관 등 관계관에게 첩보를 제공하고 접촉을 차단한 바 있으며 98년9월에는 군사기밀탐지 수집 및 뇌물수수 등의 물증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현역 등 7명을 구속 사법처리한 바 있습니다.

계좌추적결과입니다.

군기법 위반 사건은 금품수수로 이어지는 것이 통례인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94년9월14일부터 11월4일까지, 96년6월부터 98년8월까지 2년2개월동안의 린다 김 계좌를 추적한 결과 뇌물을 수수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 했으며 전 장관 등 로비대상자의 계좌 상에서도 확인이 불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백두체제 현 사업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4월말 현재 총 사업금액 2억3,209만불 중 76%인 1억7,729만불이 지불되었으며 이 중 항공기대금은 5,181만불 전액 지불되었습니다.

사업추진진도로서 장비제작은 항공기의 장비를 탑재하기 위한 체계결합이 진행 중에 있으며 4월말 현재 1호기는 91% 4호기는 46%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장비운용요원 36명과 항공기 조종사 및 정비요원 20명이 금년 9월부터 과정별로 제작업체에서 현지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달 30일부터 6월10일까지 지상수락시험을, 7월에는 비행수락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수요부대 및 관련기관 요원이 직접 참가하여 검증할 예정입니다.

금년 12월에 백두체제운영부대를 창설하고 내년 2 내지 3월 중에 한국내 수락시험을 거쳐 완벽하게 확인 후 4월에 인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결론적으로 백두사업은 제반기록을 확인한 결과 정상적인 절차에 의거 추진되어 왔으며 제작 중인 장비는 미 현지 및 국내의 수락시험을 통하여 장비의 모든 성능을 검증 후 인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및 언론에서 지적된 사항을 유념하여 전력화 후 장비 성능 발휘에 차질이 없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어서 언론에서 제기한 기타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동부지역 전자전 장비, 중거리 공대지 유도탄, 대공제압 무인기, 전자광학영상장비 사업 순입니다.

동부지역 전자전장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적 전술 통신망에 대한 무선통신 감청과 전파방해를 위해 97년도부터 00년간 767억원을 투자하여 전자전장비 35대를 국외 직구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경위는 93년에 독일과 프랑스 장비를 대상장비로 선정하고 95년 7월에 이스라엘 장비 소개회가 개최된 이후 96년 2월 이스라엘 장비가 대상장비로 추가선정 되었습니다.

이어서 96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해외 시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3개국 장비 공히 전투용 사용불가로 판정되었습니다.

따라서 97년 2월 ROC를 수정보완하고 재시험평가를 한 결과 독일과 프랑스 장비는 재선정되었고 이스라엘 장비는 ROC 미충족으로 탈락되었습니다.

97년 11월 프랑스 톱슨사 장비로 기종결정을 하였으며 그 이유는 톱슨사의 가격이 23% 저렴하고 기술조건이 우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99년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30대의 장비가 도입되어 현재는 성능점검 및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린다 김이 로비에 의해 이스라엘 장비가 추가로 대상장비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검토해 본 결과 이스라엘 장비가 추가로 선정된 이유가 95년 7월 이스라엘 IAI사의 무기체계 소개회가 개최되었고 동년 9월부터 12월까지 실무회의와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검토를 거쳐 96년 2월 합참무기체계협의회에서 이스라엘 장비를 추가로 선정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장비는 대상장비에서 탈락되었으며 그 이유는 재시험평가 결과 안테나 부피가 크고 중량이 과다하여 제한된 차량에 탑재가 불가하여 별도의 적재차량이 소요되는 등 ROC가 미충족되어 탈락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앞에서 추진경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반사업 추진사항의 의사결정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거 수행되었고 사업추진 진행과정에서 린다 김의 로비 의혹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중거리 공대지 유도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시, 주·야간 적 지상표적을 적의 대공위협 사거리 밖에서 정밀공격하기 위해 99년부터 03년까지 1,622억원을 투자하여 중거리 공대지 유도탄 100발을 국외 직구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경위는 94년 공군에서 소요제기 이후 AGM-130, AGM-142, POPEYE-1을 대상 무기체제로 선정하였으며 96년 해외 직구매로 획득방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97년 시험평가를 실시하였고 동년 9월에 AGM-142로 기종을 결정하였습니다.

98년 IMF로 사업착수를 00년으로 순연하였으나 군 건의에 따라 99년 재투자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작년 7월 집행 승인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린다 김이 군사기밀을 수집하여 로비에 활용한 의혹이 있으며 국방부는 무기체계 선정후 1년6개월만에 미국 록히드마틴과 이스라엘 라파엘의 합작사 제품인 AGM-142로 기종결정하였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를 검토해 본 결과 본 사업은 최초 공군에서 무기체계 소요를 제기한 시점부터 집행승인까지 국방획득관리규정에 의거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언론에 보도된 군사기밀을 수집하여 로비에 활용하였다는 의혹은 확인해 보았으나 입증할만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1년6개월만에 록히드마틴과 이스라엘 라파엘 합작사 제품 AGM-142로 기종결정된 것은 94년 3월 판문점 회담시 북한대표의 “서울 불바다” 위협발언 등으로 동년 4월 긴급 소요제기되어 97년 9월에 기종결정되었던 것으로 사업추진 절차상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공제압무인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적의 대공위협 레이다를 파괴시킴으로

써 아군 항공기의 생존성을 증대하기 위해 97년부터 01년까지 795억원을 투자하여 HARPY 120대를 국외 직구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경위는 95년 공군에서 무기체계 선정을 건의 하였으며 이때 장비는 이스라엘 HARPY와 프랑스의 MARULA 장비였습니다.

이 기종들에 대하여 비용 대 효과분석을 실시한 후에 96년 4월 HARPY를 단일 무기체제로 선정하고 프랑스 MARULA 장비는 탈락되었습니다.

MARULA 장비가 탈락한 이유는 아직 전력화가 되지 않는 장비일 뿐만 아니라 프랑스 정부의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96년 5월 획득방법이 국외 직구매로 결정된 후 97년 4월에 집행승인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된 보도 내용은 국방부에서 공군의 소요제기를 종용하였으며 사업추진이 1년도 안되어 기종이 결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검토해 본 결과 본 사업은 최초 공군에서 무기체계 선정을 건의한 시점부터 집행승인이 이루어질 때까지 국방획득관리 규정에 의거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언론에 보도된 국방부에서 공군에 소요제기를 종용하였다는 내용은 입증할만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무기체계 선정시부터 기종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1년도 안돼 기종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경쟁대상장비였던 프랑스장비가 탈락됨에 따라 단일 무기체제로 추진됨으로써 경쟁장비사업에 비해 사업의 추진기간이 단축될 수 있었기 때문이며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전자광학영상장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RF-4C에 장착 운용하는 정찰기 카메라는 기상이 양호한 주간에 한하여 적 군사활동을 촬영해야 하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01~03년간 680억을 투자하여 주야간 실시간으로 영상정보 수집이 가능한 전자광학장비 1식을 해외 직구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경위는 91년 공군에서 소요제기되어 97년 획득방법이 해외구매로 결정되었으며 99년 2월에 획득계획을 공고하여 6월 시험평가 대상장비를 선정하였으며 대상장비로는 미국의 DB-110 등 4개 장비가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2월 기종결정을 공군에 위임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재 공군에서 대상업체에 요구할 제안요구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금년 후반기에는 공군에서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하여 종합평가하고 내년 전반기에 기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된 언론보도 내용을 보고드리면 린다 김은 항공전자전장비사업 등 군사기밀 사항을 수집해 로비에 활용하였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를 검토해 본 결과 본 사업은 현재 공군에서 4개 대상업체들에게 제안요구서를 발송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고 사업 초기단계에 있으며 국방획득관리 규정에 의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덧붙인 사법 및 징계처리 결과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韓英洙** 질의를 하실 위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鄭在文委員** 질의가 아니고 보고자료에 보면 린다 김 린다 김 하는데 린다 김이 누구지도 국방부가 파악해서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韓英洙** 예, 질의 답변과정에서 전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 보고를 받았습시다. 이제는 위원 여러분들이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백두사업 뿐만 아니라 매항리 포격에 따른 민간피해 문제라든지 또 오늘 제기되지 않는 문제도 국방에 관계되는 문제가 있으면 광범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나라당의 朴世煥 위원이 질의를 해주시는데 오늘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열 분이 넘습시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도로 요령있게 질의를 하셔서 적절하게 시간을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朴世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煥委員** 한나라당 朴世煥 위원입니다.

장관 부재중에 차관이 나오셔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국방위원회가 오랜만에 열리기 때문에 사실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신문에도 많이 보도됐고 하기 때문에 요점위주로 해서 질의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에서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정책은 힘으로 뒷받침을 해야 하는데 힘으로 뒷받침을 해야 될 군의 군수분야에 구멍이 생겨서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린다 김 사건과 백두사업에 관해서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첫째는 린다 김 사건에 나타난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을 풀어주는 것이 지금 국방부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군수분야에 계속적인 비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軍需非理를 근절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없겠는가 하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첫째, 국방부가 밝혀야 할 린다 김 사건에 나타난 의혹이라는 것은 이번에 린다 김이 주로 중하위 공직자는 상대를 하지 않고 주로 고위 장관급을 상대로 했습니다. 또 개인적인 편지가 오고간 것이 있습니다. 주로 만나는 것이 개별적으로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만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고 또한 국방부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절차를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방부가 조치한 백두사업 도입장비 선정당시에 高位公職者들이 부당한 영향력을 구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밝히고 만약에 의혹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수사에 착수할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30억원의 국내유입과 뇌물수수 관계가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 자체를 축소·은폐·중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국방부는 군검찰을 미국에 보내서 조사를 한 것을 검찰에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사를 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신문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9년초에 검찰에 넘겨준 자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방부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軍事機密 유출여부와 제3의 인물 여부입니다.

국방관계 고위인사들이 린다 김과 교분을 가짐으로 인해서 군사기밀이 유출되거나 또한 제3의 인물에 의해서 권력층의 비호를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언론에 보도

된 이외에 군사기밀이 군고위층을 통해서 유출되었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수사여부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소중지된 린다 김이 수사검사 등에게 검찰의 신병처리계획을 확인하지도 않고 올해 3월에 귀국한 것은 귀국에 앞서 누군가에게 불구속 기소 보장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린다 김과 교분을 가진 것으로 최근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국내 정·관계인사 외에 또 다른 실세 고위층의 존재가 주목되는데 이런 제3의 인물에 대해서 국방부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기에 대한 의문은 국내의 군사평론가 모씨가 얼마전에 제기한 문제인데 이것도 국방부가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백두사업과 관련해서 거의 현존장비가 아니고 주 문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情報自主化라고 하는데 미측의 장비를 선택함으로써 인해서 미측에 정보의 예측화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이 현존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부르는 대로 주어야 하지 않느냐, 상당히 고가로 사들여올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주장을 하는 평론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해명을 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본위원이 이번 군수비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대책방안을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국회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방향은 지난번 방위력개선소위가 백두사업을 어느 정도 심사를 했듯이 앞으로 이런 제도를 상설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기 도입절차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기획득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무기선정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무기획득절차를 규정하는 법제화를 국회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국회차원에서 16대에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방부의 견해는 어떤가 하는 것을 문의하는 것입니다.

다음 실무자와 소요군의 意見收斂이 확대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F18이 F16으로 변경되면서 거액의 커미션이 오갔다는 의혹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공군이 강력하게 반발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수 비전문가인 고위층에서 무기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무기체계 선정책임을 국방부가, 또 국방부에 집중시키는 것 보다는 각군총장에게 과감하게 위임을 시켜서 이런 군수비리도 감소시키고 행정절차라든가 행정소요기간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과정도 단순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대폭 위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96년도에 특검단을 해체했는데 이 특검단을 부활시켜서 앞으로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해서 감사나 또한 그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것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방부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事業實名制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실명제를 보다 더 확대해서 적용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국방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는 영동지역에 화학무기폐기시설의 안전성이나 환경오염 가능성 그리고 북한과의 형평성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주장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군을 아끼고…… 또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충북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에서 이들 시설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화학무기폐기시설의 안전성과 環境汚染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에게 속시원하게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현재 수천톤의 화학무기를 북한이 보유하고 있고 또 화학무기분야에서 세계 3위의 강국입니다. 이에 대응하는 한국이 화학무기를 폐기한다면 이는 군사력 균형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비역장성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상당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북한도 화학무기금지협약에 기입토록 국제적인 압력을 가하든가 아니면 우리도 자구책으로 여기에 대비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북한과의 군사력균형을 위한 국방부의 어떤 대비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병무비리 수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무비리는 엄격하게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병역의무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성한 병역관계를 선거에 이용하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 제가 지난 4월13일 총선을 보면서 병무비리수사를 대통령이 1월에 검찰에 직접수사를 지시하셨고 또 검찰은 그 후에 얼마 있다가 정치인 조사를 총선 후로 미루겠다고 한 번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4·13 총선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총선 전에 소환이라는 정치적 카드를 심분 활용해서 병무비리수사 자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14일 군경합동수사반은 석 달 동안의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면서 정치인에 대한 비리혐의를 확인할 수가 없다고 수사를 종결시켰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면 병역비리수사가 바로 총선용이었다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군을 아끼고 염려하는 뜻에서 군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걱정하는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본위원은 병무비리에 해당되는 정치인 명단을 요구했지만 그 혐의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사를 종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선의의 피해를 본 많은 정치인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방부가 사과를 하고 명예회복을 시켜야 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인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또 거기에 따른 사과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위원은 강력하게 이 문제를 해명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향리 미공군 쿠니사격장 폭격피해 사건과 SOFA 개정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매향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쿠니사격장을 폐쇄 이전하거나 매향리 주민을 이주시키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상이 충분치 않아서 타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차제에 매향리 주민 이주방안을 설명해 주고 또 차제에 미공군폭격장을 이전시킬 방안은 없는지 밝혀 주기 바라면서 특히 공군 사령관 미8군작전참모부장 간에 서명한 쿠니사격장과 관련하여 한미간의 공대지미사일사격장 양해각서 MOU가 있다고

하는데 이의 유무를 국방부가 확인해 주고 또 그 내용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각서가 있다면 본위원은 각서 개정시에 미공군이 피해보상을 규정하는 규정도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A-10기에는 전차 파괴를 위한 우라늄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환경오염과 인체유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설명이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끝으로 한미주둔 지위협정 SOFA 개정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급격히 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실련과 대한변협은 SOFA의 일부 조항이 국법상의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그리고 노동권을 제한하고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항리 사건으로 인해서 이러한 불평등한 내용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 SOFA개정에 대한 국방부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英洙 朴世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새천년민주당의 安東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東善委員 安東善 위원입니다.

지금 국방부의 현황보고를 듣고 그 추진경과부터 결론까지의 보고를 보면 이 국방위원회가 오늘 왜 열렸는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하나의 하자도 없이 이 백두사업이 추진되었고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도 질타하는 린다 김인가 하는 로비사건에 대해서도 국방부의 보고에는 하나도 하자를 인정하는, 그래서 그 불법로비에 의해서 무기구매가 국가에 엄청난 해를 끼쳤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에 대한 시원한 답변이 없습니다.

방금 국방부 보고 중 무기구입에 대한 국방부측의 답변을 보면 미국정부가 그 성능을 보장해서 그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서 무기구입을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정부가 무기성능을 보장하는 그런 기구입니까? 한국의 모든 무기를 구입하는데 미국정부만 성능이 좋다고 보장하면 전부 합격점이 되는 것입니까?

국방부의 현황보고에서 조금도 부끄럼 없이 이렇게 보고를 한다는 것은 정말 국민의 자존심과 정부의 자존심을 그야말로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미국정부가 성능을 보장한다고 하면 우리쪽에서 이런 기구를 구매여 만들 필요도 없고 단지 미국정부한테 가서 물어보고 성능만 확실하다 하면, 무엇 때문에 국방에 많은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면서 무기를 구입하는 절차를 밟느냐 이것을 국방부에게 먼저 경고를 합니다.

또 국방부의 현황보고를 들으면 지금 이 백두사업에 아무 하자가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데 李養鎬 전 국방장관의 말을 빌리면 그 린다 김을 소개받았을 때는 이미 그 백두사업 납품권을 따내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로비가 다 끝난 상태였다 그렇게 李養鎬 전 국방장관도 당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보고서에는 전장관이 이렇게 전면 로비가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데도 전혀 그런 로비의 흔적도 없이 보고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선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또 전방위 로비를 끝낸 상태다 하면 지금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말하자면 당시 구 정권의 권부의 핵심, 가장 측근들도 여기 로비에 가담되어 있다 하는 이런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당시 김윤도 변호사라고 하면 권력핵심에서 가장 가깝게 있던 인물인데 권력의 핵심에서 개입하고 있다고 하는 암시를 김윤도 변호사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보면……

그렇다고 하면 이 백두사업의 전면 로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런 국민적인 의혹을 국방부는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있다 하는 데에 대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국방부에 물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방장관은 李養鎬 전 국방장관이 제기한 전방위로비라고 하는 그 실체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아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이번 백두사업의 로비의 증거과정을 발언하려고 합니다. 이 백두사업에 참여한 미국의 3개 회사 중 1개사를 1차로 선정하기 위해서 95-10차 획득심의회가 95년6월1일 열렸는데 그 동안 시험평가를 맡았던 9125부대는 95년1월23일자로 된 확정 33519-8 공문의 지시에 의거해서 정상적으로 평가작업을 시행하여 평가보고서를 95년5월18일자로 제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권기대 백두사업단장은 이를 근거로 ESL 플러스 펠콘을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갑자기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정보본부안을 제시해 가지고 국방과학연구소는 95

년5월25일자로 된 획삼 33510-189 공문의 지시에 의거해서 5일만인 5월30일자로 급조된 기술검토보고서를 제출했고 또 국방정보본부는 출처가 의심스러운 94년2월23일자로 된 시험평가결과를 제시하면서 E-시스템 플러스 호커800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날 회의 이후 국방부는 결국 비싸다는 이유로 ESL 플러스 펄콘을 거부하고 E-시스템 플러스 호커800을 국방장관에게 최종 건의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 95-10차 획득심의회는 E-시스템 플러스 호커800을 선정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각본을 짰, 연극각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고 린다 김의 로비가 여기에 작용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방장관은 당시 획득심의회에 당초 시험평가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았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과학연구소의 안을 급조해 가지고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이 과정에서 린다 김의 로비가 작용했다는 본위원의 주장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백두사업의 기종선정문제입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94년9월경에 특별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장비업체에게 기종선택권을 맡긴 것도 의혹을 낳는 요인인 것입니다. 항공사간의 경쟁을 통해서 항공기를 선정함으로써 국가예산을 절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여 특정 항공기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항공기와 탑재장비를 별도로 시험평가한 후에 선정한다면 체계결합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장비업체에게 기종선택권을 맡겼는데 이는 논리의 비약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즉 기종을 국방부가 선정하더라도 선정 이후에 장비업체에게 항공기의 사양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며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어째서 장비회사에게 먼저 기종을 선택하라고 하는 절차를 밟았는지, 순서를 그렇게 했는지, 이것은 어떤 로비의 작용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방장관은 장비업체에 기종선택권을 맡긴 것이 바로 로비에 의한 특혜라는 본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견해를 솔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백두사업에 대한 대응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98년에 군기무사에서는 감청과 계좌추적을 실시해서 로비의 실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당시 국방부 영장담당판사였던 배모

변호사의 언론인터뷰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98년 백두사업에 대한 국방부의 특별평가팀이 편성되어서 종합적으로 백두사업의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통신장비의 정보방향탐지정확도를 포함해서 군이 요구한 성능 23개 항목 중 12개 항목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정권하에서 시작한 이 백두사업이 이처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 이러한 비리와 문제점을 공개해서 국민여론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었는데 이를 하지 못하고 마치 현 정권이 전 정권하에서 일어난 백두사업의 비리와 문제점을 비호하는 것으로 비취지게 한 것은 큰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은 백두사업에 관련된 로비 의혹을 기무사가 조사했는데도 발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백두사업에 대해서 98년10월경 미국측과 최종 협상을 해서 문제점을 보완하였다고 하는데 이 협상으로 문제점이 전부 해결된 것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고 그 최종 협상을 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朴世煥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방부 보고에는 우라늄탄에 대한 얘기를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 미공군전투기 조종사 출신인 브라이언 윌슨씨가 매향리 해안에서 우라늄 열화학폭탄 파편을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보고에는 한 마디도 이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즉 주한미군은 97년 당시 미군기지 땅 되찾기 대구시민모임에 우라늄탄 보유확인 질의에 대해서 짐폴리 주한 미8군사령부 대변인 명의의 회신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적대행위가 일어났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열화학우라늄탄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사용한 적은 없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로부터 5개월 뒤인 97년8월 케네스 베이컨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일본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일미군이 지난 2월이후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우라늄탄을 전면 철거, 한반도 유사사태에 대비해서 잠재적 전장인 남한에 이송했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미공군전투기 조종사 출신인 브라이언 윌슨씨가 세종문화회관에서 16일자로 반제 자주를 위한 2000년 국제평화대회 국제세미나에서 경기도 매향리 훈련장을 찾아서 미공군이 우라늄이 부착된 폭탄을 훈련에 사용했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국방부는 얼마나 확인을 하

고 있고 그 진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정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 국방부장관은 우라늄탄의 주한미군 보유 및 사용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우라늄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朴世煥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매항리 사태를 계기로 해서 한미행정협정의 개정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선 한미행정협정은 배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피해 책임이 전적으로 미군 측에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도 배상비용의 75%를 미군 측이 나머지는 한국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배상위원회 심의결과를 미군 측이 순순히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조항 뿐만 아니라 다른 불평등 조항도 시급히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인권과 민족적 자존심을 중요시하는 국민의 정부의 좀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은 한미행정협정 개정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韓英洙 安東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민주연합의 李東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馥委員 李東馥 위원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본위원이 국방위원회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마는 15대 국회 국방위원회가 방위력개선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군수비리, 부정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본위원도 그러한 노력에 동참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이제 문을 닫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게다가 16대 국회는 제가 들어오지 않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 국회에서의 임무가 거의 종료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입장에 있는 본위원을 포함해서 15대 국회 국방위원들이 오늘 여기에서 회의를 갖고 방위력개선사업문제와 관련해서 오늘과 같은 회의를 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괴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송구스러움을 느낍니다.

安東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오늘 국방위원회를 왜 해야 되느냐 하는데 대해서 본위

원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회의감을 느낍니다. 오늘 회의는 아까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국방부에서 보고해 주셨지만 사실 린다 김이라고 하는 이름의 한 여성이 있으므로 해서 이 회의가 있게 되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소위 린다 김에 관한 문제는 국회에서 다를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법당국에서 다루어야 되고 국방부에도 사법기능이 있고 또 정부에도 검찰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이렇게 물의가 비등하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에서는 손을 놓고 팔짱만 끼고 가만히 있고 국회 국방위원회가 오늘 이 시점에서 회의를 열어 가지고 그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국가 기능 면에서 잘못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국방부에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백두·금강사업을 포함해서 거론되고 있는 모든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해서 하나는 전혀 잘못이 없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한 자락 깔고 있고 그리고 린다 김으로부터 아무런 로비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다 본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적절치가 않습니다. 첫째로 린다 김 문제는 그렇습니다. 린다 김이 되었든 린다 원더우먼이 되었든 스티브 김이 되었든 우리가 로비 그 자체를 범죄시해서는 안됩니다. 국방부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무기체계문제를 다루면서 사실 로비스트들의 도움을 얼마나 받습니까? 로비스트들의 도움이 없으면 국방부의 무기체계, 방위력개선사업이 이만큼 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로비스트들의 활동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모든 선진국이 정상적인 로비스트들은 합법화시켜서 정정당당하게 어떤 제품을 소개하고 섭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어떻게 된 것인지 제도적으로 그것이 잘못되어 있고 관행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거의 90% 가까이를 로비스트들에게 의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표면적으로는 로비하면 완전히 범죄인으로 만들어서 아주 敬而遠之하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오늘 보고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린다 김이 벌인 로비활동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것이었다면 국방부가 이것을 이렇게 털어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항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린다 김이라고 하는 여자가 부적절한 관계, 부적절한 활동

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방부의 의사 결정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범죄수사의 영역이고 범죄수사의 기능을 가진 정부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보고서 12페이지를 보면 린다 김에게 국방부가 면죄부를 주고 계십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의 거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돈의 거래를 추적해 보니까 아무 것도 나타난 것이 없다. 그런데 그 동안에 지상을 통해서 문제가 된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돈 대신 자기 몸을 대가로 해서 부적절한 활동을 한 부분이 있다라는 의혹을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최근에 린다 김을 잘 안다고 하고 린다 김의 행적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조금 색다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이번에 일이 벌어진 것은 바로 린다 김이 또는 린다 김 주변의 특정한 세력 또는 인사들이 만들어낸 자작극이다, 어떠한 자작극이냐? 지금 지상에도 죽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전직 장관을 포함해서 백두·금강을 포함해서 이러한 무기체계를 채택하고 린다 김이 도와주려고 하던 업체로 사업이 떨어지게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분들이 성공불 조건으로 상당한 거래 약속이 린다 김과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성공불을 지급해야 될 단계에 와서 린다 김이 그것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선행조작으로서 이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유력한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지금 린다 김의 이런 부적절한 관계를 뒷받침하는 가장 유력한 물적 증거는 편지들입니다. 이 편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개가 됩니까? 지금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채로 린다 김의 편지가 있는 미국의 어떤 곳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들고 나와 가지고 한국의 누구에게 갖다 주었다,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한 모씨다 이런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은 한이라는 사람이 실재인물이 아닌 가공인물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린다 김이 바로 그 장본인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스캔들로 비화시킴으로 해서 사회적 문제로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성공불로 지불하게 되어있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도 좋을 상황을 지금 성공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하나의 시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포함해서 최근에 이 문제를 가지고 보도된 여러 가지 추행들, 추세를 본다면 당연히 국방부나 검찰이 손을 댈어야 됩니다. 왜 손을 안 댄니까?

그리고 이 국방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방위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열린 것은 헛발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야만 되는 본위원 자신이 굉장히 자괴스럽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지금 제가 전해드린 그러한 차원의 문제는 아닌가 하는 것을 정부에서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고를 보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林福鎭 위원이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작년 방위력개선사업심사소위원회에서 8건의 방위력개선 사업을 다루었습니다. 그전에 97년말부터 98년초에 걸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백두·금강을 포함해서 여러 건의 방위력개선사업이 거론되어 가지고 그때 인수위원회에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라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끝없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IMF상황에서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당한 국고의 추가부담이 생기고 있으니까 기왕 참았던 것 조금 참아서 새정부 들어선 뒤에 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방부 얘기가 “계약을 다 체결했습니다” 언제 체결했느냐 하니까 “97년12월에 체결했습니다. 그 10여건을 한꺼번에 몰아서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두고두고 풀리지 않는 의혹이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언젠가는 풀려져야 할 의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뒤에 98년에 우리가 그중에 8건을 가려가지고 방위력개선사업심사소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 그 결과 문제가 없는 것이 발견된 게 아닙니다. 거의 모든 사업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다

른 게 아닙니다.

무기체계가 결정되고 그 기종이 결정되는 과정에 투명성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그 기종이 결정되고 사업이 결정될 때 문서가 파기되고 없었습니다. 그것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千容宅장관이 처음에는 이것이 문서처리규정에 의해서 처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공문서처리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을 지라도 이 방위력개선사업을 포함해서 몇 가지 특수하게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문서처리규정에 의하면 10년, 20년, 30년 또 영구보존이 필요한 문서들이었는데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공문서처리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형식적으로 지키면서 다 파기해 버렸던 것입니다.

아마 백두·금강에도 지금 상당한 문서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 없던 것으로 방위력개선사업심사소 위원회에서 파악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CN-235 사업을 빼놓고는 거의 모든 사업의 예산이 거의 다 집행되었습니다. 다 집행되었어요. 50% 이상 집행되고 백두·금강사업에 비해서는 100%가 지급됐고 그런 사업을 가지고 지금 새삼스럽게 문제삼아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방위력개선사업심사소위원회에서 종결을 지었던 것입니다.

다만 예산집행이 아직 충분히 되지 않았던 CN-235에 대해서는 국회가 상당한 조건을 걸어가 지고 이것을 중지시켰었는데 이것도 그 뒤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끝에 지금 부실사업화의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반기록을 확인한 결과 정상적인 절차에 의거해서 추진되어 왔다” 이것은 이제 의정생활을 일단 마감하는 입장에 있는 본위원 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관계했던 국방위원회 활동과정에서 그런 결론이 난 적이 없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이미 기왕지사이니까 그런 문제로 인해서 성능이나 이런 데에 잘못된 것이 없도록 사후에 철저히 보완하고 해서 이 사업들이 원래 계획했고 목적했던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라 하는 주문을 붙여서 종결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제반기록을 확인한 결과 정상적인 절차에 의거해서 추진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컨대 항공기 관계가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보고는 말씀이 안돼요. 왜냐, 이 시스템 자체가 린다 김의 로비에 의해서였든지 그 기종이 결정된 경위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마는 항공기가 HAWKER-800으로 결정된 것은 원래 이 시스템의 엔지니어들도 HAWKER-800을 반대했습니다. 그것이 기록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HAWKER-800의 서플라이사인 RAYTHEON사가 이 시스템을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인수한 뒤에 RAYTHEON이 이 시스템의 엔지니어들한테 분명히 압력을 행사해서 그뒤에 이 시스템에서 HAWKER-800을 선호한 것으로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기록에 다 있는 것이에요. 그전에 이 시스템의 엔지니어들은 CITATION-III을 희망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사실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8페이지에 보면 3개국 장비를 비교를 했더니 전부 “전투용 사용자”다, 이것도 너무나 단순한 표현입니다. 다른 나라 장비는 현용장비이고 미국장비는 개발장비인데 기존 현용장비하고 개발장비하고 어떻게 단순비교가 됩니까? 개발장비는 스펙을 가지고 여기에서는 비교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동등한 자격을 주어서 비교했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현용장비와 성능을 비교한 것을 가지고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방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령 본 위원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더 거론하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16대 국회에 참가할 동료·선배위원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백두·금강사업이 이제 체제결합, 성능시험단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잘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문제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국방부가 이런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다루어 주셔야지 지금 이렇게 오늘 보고하신 것처럼 정상적이다 하는 것은 그동안 15대 국회에 참가해서 이 문제를 다루었던 위원들은 얼굴을 들고 어디로 가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매우 부적절한 입장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 구체적인 사항은 16대 국회에 참가해서 계속 이런 문제를 다룰 위원들의 몫으로 남겨두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러한 소회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韓英洙 李東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나라당의 河璟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河璟根委員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위 린다 김이 회장으로 있는 무기중개업체인 IMCL이 소위 무역대리점으로서 계약체결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8월 국방부가 제출한 무역대리점 업체등록 현황을 보면 IMCL은 조달본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단장님, 이것이 사실이지요?

등록되어 있습니까?

○國防部調達本部調達管理部長 李賢根 96년도에는 등록이 안된 것이 많습니다.

○河璟根委員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IMCL은 백두사업이 계약된 이후인 98년1월12일에 처음으로 조달본부에 등록되었습니다. 또한 본위원이 조사하고 파악한 바에 의하면 96년 백두사업을 계약한 무역대리점은 주식회사 윤일통상, 대표자는 최윤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윤일통상의 거래 해외업체는 미국의 BANTECH와 TPS 그리고 네덜란드의 SIGNAL사로 취급물품은 레이더와 항공부속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즉 군납업체 등록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E-System 또는 RAYTHEON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주식회사 윤일통상이 백두사업의 무역대리점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근거와 배경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떻게 해서 또 어떤 연유로 린다 김의 IMCL은 98년1월에 무역대리점으로 등록되었는지 그 배경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에 계약에 참여했던 윤일통상이 어떠한 이유로 배제가 되고 린다 김의 IMCL이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백두사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 98년도, 99년도 당 소위원회에서 본위원이 몇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탑재중량에 관한 것인데 RAYTHEON사가 제시하는 탑재중량하고 우리 군이 제시하는 탑재중량과 그 용량

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실 것은 우리 군이 제시하는 탑재중량이 몇 킬로그램인지 RAYTHEON사가 제시하는 것은 우리 군이 제시하는 것의 반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분명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중선정에 있어서도 아까 앞에 말씀한 동료위원들께서 여러번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백두사업의 주임무에 부합되는 800RA 및 800SIG가 계약당시에 개발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개발된 민수용 중형항공기인 800XP를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국방부는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아까 보고에는 백두사업은 현존장비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ROC에 맞도록 주문제작 운운을 했는데 사실 당시 기록에 보면 800RA나 800SIG는 우리 백두사업에 맞는 기종으로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고 민수용 중형항공기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도 국방부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무기체계운용에 있어서 반드시 수반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있어서 우리 군은 거기에 전혀 참여하지도 못했고 관여하지도 않았고 또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사실은 군에서 몰라서 그랬다고 하는 것을 자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문제를 제기했을 때 국방부는 한국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미 국가안전보장국 요원과 9125부대 요원을 제작회사에 상주시킴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이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미사업단의 전산체계 담당자는 실전경험이 별로 없는 현 육군대위가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실제 우리가 소프트웨어에 관여하기 위해서 취한 진지한 태도인지 아니면 국회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일종의 립서비스로 육군대위 정도 하나를 배치한 것인지 이것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본위원이 소위원회에서 제기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관한 비용문제인데 또한 운영유지비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지 하는 것도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노파심에서 묻는 것입니다마는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HAWKER-800 XP는 RAYTHEON사가 중국에 이미 제공한 것으로 알

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방공체계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인지 노파심에서 이 문제도 제기합니다.

(韓英洙 위원장, 許大梵 간사와 사회교대)

아까 위원장께서 린다 김문제 이외에도 국방관계 문제를 제기하라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소위원장으로 있는 김훈중위사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작년 5월에 사실은 1차보고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뒤에 100% 확실한 확증을 잡은 제2차 보고서를 며칠 전에 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김훈중위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서 국방부가 이 이상 더 고집을 부리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 역사의 진실은 한순간의 은폐는 가능할 수 있어도 결코 영구히 감추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그 순리와 교훈을 잘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代理 許大梵 河璟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張永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永達委員 새천년민주당 張永達 위원입니다.

먼저 백두사업 관련해서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지난 98년 국정감사때 그 전후에 걸쳐서 누차 얘기가 된 것인데 이것이 다시 오늘날 현안으로 대두가 되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국방위까지 소집이 되어서 재탕 삼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고 또 국민에게는 우리가 뭔가 밝힐 게 있으면 분명히 밝혀드려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74년도에 사이공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노이 월맹군에 비해서, 사이공 월남군대 숫자로 보거나 무기 질로 보거나 무기 양으로 보거나 도저히 하노이 월맹군이 사이공 월남군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1년 동안 월남 전쟁에 가서 월남 민간인들을 만나 보고 한 경험들이 많이 있었는데 티유나 쿠엔카오키 정부가 월남군을 지휘하고 미군과 한국군과 연대해서 전쟁을 하고 있었지만 월남 민심이 월남 정부를 떠나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다 놓고 해보았자 민심이 떠나면 전쟁은 못 이기더라. 아주 전형적인 교훈을 월남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백두사업과 관련된 소위 린다 김으로 다시 대두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또 본위원이 국방부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지금 국민들이 국방부를, 우리 정부를 보는 시각이 무언가 하는 것을 정확히 깨달아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국방이 튼튼하게 서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6·25 전후로부터, 하여튼 해방 이후 지금까지 다른 분야는 몰라도 국방분야만은 우리 적이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세금 내라면 말 없이 내고 또 무기 산다면 무얼 사오는지 몰라도 무조건 잘 하고 있겠거니 이렇게 해왔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군대 보내라고 하면 다 보냈는데 이 백두사업 이런 것이 불거져 나와 가지고 국민들은 아하, 수십년 동안 그렇게 믿어왔었는데 모든 것들이 비밀이라고 치부되는 가운데에서 뒷구멍에서 무기를 사오는 데도 이런 엄청난 비리들이 숨어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일국의 국방부장관 정도 되는 사람들까지 로비스트라고 하는 여인들하고의 관계, 무슨 부적절한 관계가 두 번 있었다고 하지만 부적절한 관계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금전거래 비리가 거기에 가득찬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국방부를 보는 눈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이런 의혹에 대해서 철차상 아무 이상이 없었다, 오늘 보고에도 보면 규정상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미 그렇게 끈이 듣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린다 김 사건, 서신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현안이 되었을 때 국방부에서는, 제가 보기에 는 그래요. 전 이양호 국방부장관 이 사람을 당장에 검찰에서 수사하라고 하고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도대체가 국방부장관이라는 사람이 왜 로비스트가 묵고 있다라고 하는 호텔 그 방에 가서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면서 묵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고 그 가운데에서 2억 몇천만 달러가 되는 백두사업이 이야기가 되고 도대체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가, 안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은 납득을 못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방부에서는 이양호 전 국방부장관을 당장에 검찰에서 다시 조사하도록 요청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거기에서부터 단서를 잡아서 이 문제를 적어도 리바이벌 하더라도 국민 앞에 밝혀 주었어야 되는 사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더더욱이나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이것도 과거에 이야기를 누누이 한 것입니다. 이 HAWKER-800 또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장비들을 구입하면서 2억 수천만 달러의 계약을 하는데 물론 HAWKER-800이 이 장비들을 싣고 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이스라엘이나 불란서 전문가들도 동의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 국방부에서는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한 두 푼 가는 장비도 아니고 몇 억 달러가 넘는 이런 장비를 구입하면서 ‘이것을 싣고 다닐 정찰기는 알아서 구입해서 하십시오, 돈이야 얼마 가든지 거기에다 그냥 맡기겠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비싼 장비를 사면서, 주부들이 시장에 가서 무슨 두부를 하나 사거나 배추 한 포기 사는데도 아, 이것은 너무 비싸다, 싸다 이렇게 따지는 우리 국민들이 계시는데 수억 달러 가는 장비를 미국 당신네들이 알아서 그것은 구입해라 이렇게 했다고 보도가 되고 국민 앞에 알려지니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러한 불신들을 국방부가 씻어주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국방부가 어떻게 무슨 말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본위원이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또 국방부가 지금 오해를 사고 본위원 같은 입장에서도 석연치 않은 것은 이 사업결정은 과거 YS 정권 문민정부에서 소요 제기가 되고 결정이 되었지요. 그리고 이 정부에서 넘겨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우리 국민 눈에는 어떻게 비치고 있느냐? 과거 정부때에 사업이 소요 제기되어서 결정되어 가지고 집행은 되었지만 현 국방부에서 과거 동료들이 저질러놓은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 가지 하자가 있고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 동료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참 답변하기 좋은 어떤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그 규정에 아무 탈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이렇게만 그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부가 과거에 실행했던 사람들로부터, 중간에 또 이 문제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이 구속도 되고 그랬다고 해요. 일설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무슨 권기대, 이화수 이런 분들이 백두사업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제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움을 받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구속되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히 밝혀야 됩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남북이 수시로 긴장을 유지하면서 또 권력안보를 위해서 휴전선을 이용할 수 있을, 과거 군사정권이나 권위주의정권 때에는 모든 것을 단아놓고 국민들을 속일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되는 정도의 수준에 와서는 우리 국방부의 모든 사항도 국민에게 공개가 되어서 국민에게 투명하게 비치는 가운데에서 진행되지 않고서는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시대가 왔다. 미국이나 선진국들도 무기를 새로 수입하고 할 때에는 아, 이 무기는 몇 킬로미터 날아가는 미사일이다, 이것이 왜 필요하더라는 것을 다 공개를 하고 무기를 구매하고 새로 제작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나라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 이겁니다.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도 국방부는 과거의 무기도입이나 이런 것들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알 수 없는 사항이고 아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 가지고는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 이겁니다.

따라서 국방부가 과연 이 사업들이 처음부터, 이 각론들을 전부 얘기해 주어야 됩니다. 그 장비는 무엇무엇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HAWKER-800이 어떻게 싣고 다니고 그래서 그 과정들을 어떻게 따져보아서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야지, 더더구나 이 장비는 지구상에 있어보지 않은 장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떻게 계산해서 2억 몇천만불에 계약을 했다는 것이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두리몽실해가지고는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 이러한 의혹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확신을 우리 국민들에게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기획득을 할 때에는 관련정보를 적어도 국민에게 공개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국방부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두 번째는 무기획득의 책임성을 분명히 해야 된

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명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무기계약은 누가 했고 중간에 중도금은 누가 치렀다는 것들을 전부 실명제화 해서 아주 무덤에 가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다 책임질 수 있도록 그리고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우리가 형법논리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주장하는데 앞으로 이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법이론을 제기해서 16대 국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16대 국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崔龍圭 당선자님이 와 계신데 마침 법률가이기 때문에 함께 의논해서 이러한 점들을 보완해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무기전문가를 빠른 시일내에 양성해야 된다는 지적을 여러분들도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전문가가 없다보니까 린다 김같은 로비스트의 어떠한 공간에 놀아난 점은 없느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KBS대담 때 文一燮 실장님께서도 “참, 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하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이 전문가 양성에도 적극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습니다.

또 무기도입절차법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16대에 가서 무기도입절차법을 발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방부는 여기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묻습니다.

그리고 매향리 미 공군사격장 오폭사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까 물으셨는데 이것은 한·미간의 행정협정을 이제는 평등하게 고쳐야 됩니다. 그저 살인을 당해도 미군은 미군부대에 가서 조사받고 또 한국법에 의해서 구속되더라도 며칠 안 가서 미군들에게 인계되어 버리고…… 이래가지고서는 나라의 체통도 안 서고 우리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한·미행정협정 개정에 국방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것이 우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 또 그래야 우리의 방위력도 담보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기대합니다.

그리고 충북 영동 군 폐기물 처리시설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단체까지 같이 입회를 해서 견학을 하셨다는 보고를 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차후에 장기적으로 문제가 없겠는지 계속 검토해 주시고 그 지역주민들이 특히 불안해 하기 때문에 장기적

으로 안심해도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주민들에게도 설명하고 우리 국민 앞에도 명백하게 보고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97년에 화학무기금지협약에 가입했고 또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10년 이내에 모두 폐기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방위력은 절대적인 국민의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다, 베트남은 무기가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 신뢰가 떠났기 때문에 패망한 것이라는 교훈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린다 김사건으로 불거져 나온 백두사업의 모든 의혹들은 사법당국에서 밝혀지도록 또 전혀 다른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법당국에서 국민의 의혹을 풀어줄 수 있도록 국방부가 적극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許大梵 간사, 韓英洙 위원장과 사회교대)

○委員長 韓英洙 張永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李信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信範委員 질의할 때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으로 한 두 개 묻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린다 김 로비의혹사건을 연애사건으로 몰아서 끝내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로비의혹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린다 김과 대통령이족과 특별한 친분을 가지고 있는 재미동포 무기중개상 조풍언 씨와의 관계 그리고 방산업체인 대영전자, 대우의 부실화 그리고 현 정부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조망해야 될 현재의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의 잘못된 무기구매 로비와 관련해서 살펴보아야 될 진행중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린다 김이 백두사업과 관련해서 활동이 부자유스러워진 시점에서 조풍언 씨가 김씨가 관련된 사업의 일부를 인수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1999년에 조풍언 씨가 대우 아도니스 골프장과 대우TDX사업을 인수하려고 한 사건, 대우정보통신을 인수하는 조치와 관련해서 자신의 고교동기생이며 전 대우그룹 국내총괄회장으로서 방산업체인 대

영전자의 실질적 소유자인 윤영석씨와 어떠한 협력 관계였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영전자의 현재 이름이 휴니드 테크놀로지스로 변했는데, 대영전자와 대우그룹 방산관련사업을 가로챤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고 또 그것이 대우그룹 부실화의 한 요인이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정권과 어떠한 관계가 있길래 이 부도난 대우그룹의 전문경영인 출신인 윤영석씨가 공기기업인 한국중공업의 전문경영인으로 계속 기용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풍언 씨는 ITT 한 회사만 해도 98년 100만불에서 99년에 4,900여만불의 계약을 따내는 등 엄청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지금 있습니다. 대통령 가족과 조풍언 씨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특혜가 베풀어지고 대우그룹의 알짜기업들을 인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 가족과 조풍언 씨와의 관계는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일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동향이고 가족들과 오래도록 친밀한 관계를 맺어오셨습니다. 정부의 석연치 않은 태도 때문에 여러 가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로비사건이면서 대북장비가 노출된 심각한 사건인데도 진실을 규명하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린다 김과 관련된 사건이 사실은 대통령 가족과 친분이 두터운 무기중개상, 조풍언 씨와 관계가 되어 있고 따라서 린다 김 사건은 파고들면 대통령 가족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린다 김과 조풍언 씨와의 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1995년 백두사업이 추진될 때 로렐사의 등록된 대리인은 조풍언 씨였고 린다 김이 로비스트였다는데 사실이나 하고 질의자료들을 보내드렸는데 국방부 자료에 보니까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로렐사의 조풍언 씨와 린다 김이 함께 관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확보하셨으면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렐사는 95년에 록히드 마틴사와 합병되었는데 94년의 계약을 조풍언 씨가 연장하지 못하는 것을 린다 김이 도와주었다고 하는데 린다 김과 조풍언 씨가 그와 같이 등록되었던 것이 사실인가 하고 제가 질의했는데 국방부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흥물산의 대표이사가 록히드 마틴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대표이사는 유풍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한은 기흥물산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조풍언 씨입니다. 유풍상씨는 단지 명의만 그렇게 되어 있다가 최근에 와서 또 어떠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 자료에 보면 기흥물산의 주식보유현황과 임원명단을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임원명단이나 주식보유현황도 모르는 기업이 대리하는 미국회사와 군수물자를 거래한 것이냐? 그러면 보안문제는 어떻게 되고 기능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 로렐사와 린다 김 관계라든지 조풍언 씨와의 관계를 등록되지 않아서 모른다고 하셨지만 제가 아는 한은 린다 김이 지휘한 로렐사의 한국지사장인 수(Sue)라는 사람을 국방부의 많은 간부들이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의혹이 가지 않도록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ITT사와 조풍언 씨가 어떤 거래를 했는지 밝히라고 제가 국회에서부터 오래도록 요구해 왔습니다. 다마는 최근에 ITT와 조풍언 씨가 맺은 원본과 같은 계약서가 본위원에게 입수가 되었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국방부에 드리겠습니다. 아마 처음 보시는…… 미국회사와 무기중개상과의 계약서의 완전한 사본입니다. 이 사본의 입수경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9일 국회 본회의의 5분발언에서 본위원은 무기중개상인 조풍언 씨와 대통령가족과의 관계를 밝히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첫째 대통령의 3남이 조풍언 씨 소유의 집에 거주하거나 도움을 받는다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의혹의 사실 여부 이것을 물었고 두 번째로 조풍언 씨가 대통령의 일산사저를 구입하고서 98년7월에 지불했다는 50만달러의 국내유입 여부 등 행방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셋째로 현정권 출범 후 무기거래와 관련해서 조풍언 씨에게 어떤 특혜를 베풀었는가 물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정권과 일부 언론은 총선을 앞둔 정략으로 접근해서 진실규명을 돕기보다는 본위원을 허위·폭로로 몰아서 먹칠을 하는데 역점을 두어 가지고 이 문제의 본질을 흐려버렸습니다.

본위원은 한나라당 대통령일가 부정비리진상조사위원으로서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본위원의 명의로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KBS의 자회사인 KTE와 라디오 코리아를 상대로 2월23일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은 현재 SHIN BOM LEE 대 KTE라는 그런 영어명칭으로 지금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문서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ITT와 조풍언 씨 그리고 대통령의 3남에 대해서 관련된 모든 문서와 은행자료를 제출하도록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3월23일에 미국의 은행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 졌습니다. 대통령의 3남이 자신이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사칭을 하고 허위의 직장 MIKES FORD의 제너럴 매니저로 4,700달러를 받는다는 허위의 직장을 용자서류에 기재하는 등 미연방법상 30년의 징역형까지 가능한 용자사기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3남이 주택을 구입하면서 10만달러를 자신이 저축을 했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저축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제3자의 도움을 받은 것인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현금자금출처를 규명하고 또 조풍언 씨가 ITT사와 어떤 거래관계를 맺고 군수물자를 중개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관련자료를 제출시켜 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5월12일에 ITT사는 본위원의 변호인에게 조풍언 씨가 기흥물산 회장의 명의로 ITT사와 계약한 이 문서를 보내 왔습니다.

그리고 김대통령의 3남은 계속해서 변호사를 내세워서 소송절차에 저항하면서 은행거래 내역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진실을 밝혀지 못했고 또 조풍언 씨도 변호사를 내세워서 ITT사의 중개수수료 내역이 밝혀지지 않도록 막으려고 지금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에 보면 조풍언 씨는 일부 언론 보도와 일부 언론과의 접촉에서 부인한 것과는 달리 ITT사와 거래관계가 있고 97년7월12일 한국과의 군수거래와 관련하여 판매대리인계약을 체결했고 99년7월30일에 계약을 수정해서 2001년6월30일까지 계약을 연장하고 있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계약서에 의하면 4 내지 7%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지불한 금액의 4% 내지 7%, 여기 보면 지금 조풍언 씨와 관련된 구매에서 액수가 가장 큰 ASPJ, 전과교란장치이지요, 이것을 구매하면서 한국정부가 지불한 금액이 사천몇백만불인데 3,000만불에서 5,000만불일 때는 커미션은 5%, 500만달러 이하일 때는 7% 이렇게 해서 여기 테이블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처음 보실 것입니다.

다음에 버지니아주에 있는 공장 또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ITT제품에 관해서 7% 정도의 커미션을 주기로 조풍언 씨와 ITT사간에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조풍언 씨가 중개해서 국방부 조달본부가 ITT사와 맺은 계약은 97, 98, 99 이 3년동안에 총 8,923만2,470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합작계약분을 합치면 1억3,798만2,470달러입니다.

그런데 98년에는 102만8,924달러45센트이던 계약이 99년에는 이 ASPJ를 포함해서 4,895만2,255달러97센트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이 ASPJ 품목은 노드롭 그루만사하고 ITT가 합작한 것인데 합작계약분을 합치면 9,770만2,255달러97센트입니다.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것을 커미션으로 계산을 해 보면 98, 99년 계약분의 커미션은 199만9,247달러에서 349만8,682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25억원 내지 4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합작분을 합치면 커미션은 394만9,247달러에서 691만1,182달러에 이릅니다. 총 45억원에서 80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돈입니다.

대통령의 일산자택을 구입하면서 조풍언 씨가 지불한 금액이 50만달러인 점을 감안할 때 커미션이 200만달러에서 350만불에 이른다는 것은 그 집을 몇 채를 사고도 남는 그런 커미션이 조풍언 씨에게 지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풍언 씨가 ASPJ에 관해서 ITT사와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국방부가 저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ASPJ는 슬쩍 숨겨놓고 여기에 액수가 얼마 크지 않은 다른 품목을 앞에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달리 입수한 자료에서 ASPJ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풍언 씨가 98년과 비교해서 99년에 이렇게 47.5배나 되도록 계약을 늘려준 것은 대통령가족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베푼 특혜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흥물산이 99년 방산수주액에서 업계 3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흥물산 법인등기부에서 94년도에 조씨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조씨는 그 이후에도 기흥물산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등록된 무역대리인 대표자가 아닌 조씨 개인에게 특혜를 베푼 이유가 뭐니까? 이 부분이 해명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 기흥의 등록을 유평상이라고 하는 대리인으로 국방부에 등록해 놓고 여기 지금 이 계약서에 보시면 여기에 99년7월30일

자로 서명한 계약서에 보시면 파커라는 ITT사장과 조풍언이라는 개인이 기흥물산의 회장이라고 자처하면서 서명을 했습니다. 국방부에는 기흥물산의 대표는 유봉상이라고 등록을 해놓고 실제 거래는 조풍언이라는 신원도 증명되지 않는 미국국적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다 했다. 갖다가 보십시오.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대리인과 다른 명의의 사람에게 특혜를 베푸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대통령가족의 압력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기흥물산이라는 위장간판을 내세워서 등록도 하지 않고 조풍언 씨는 군수물자거래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는 조풍언 씨가 ITT와 거래하면서 몇 퍼센트의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로스엔젤레스 법원에 중개수수료의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고, 거기 앞에 붙어 있는 ITT 변호사의 편지에 의하면 아주 빠른 시일내에 모든 진실규명에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조풍언 씨가 해외에서 불법행위 흔적을 ITT에 알려주면 즉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씨가 국내에서의 로비활동과 관련하여 접촉한 인물이나 정치인들의 명단, 이것을 지금 기무사나 국방부에서는 파악하고 있는지? 이 점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ITT사에서 얘기한 대로 해외에서의 부패활동방지법을 준수하겠다고 조풍언 씨가 거기 각서를 써 놓았는데…… 그 서류뒤에 붙어 있습니다. 만일 부정행위가 있다면 ITT사로서는 조풍언 씨와의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정부는 그런 부정행위를 알고 있다면 ITT사에 알려줘서 이 계약을 파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등록된 로비스트들의 자금은 불법이 아닙니다. 문제는 권력의 실세나 고위 공무원들이 관여해서 돈을 빼갔거나 빼내려고 하는 그 점이 문제인 것입니다.

또 조씨가 대우 아도니스 골프장 인수계약금 49억원, 작년 9월13입니다.대우통신 TDX사업 인수시 도시에 계약금으로 99년6월말에 236억원, 대우 정보시스템을 99년6월에 인수하면서 250억원, 이렇게 많은 수백억원의 돈을 동원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원한 수백억원의 돈과 이 무기거래에서 특혜로 벌어들인 돈은 과연 한·미 양국의 외환거래규정이나 세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처리된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이 제기됩니다.

불과 3개월 사이에 조풍언 씨가 600여억원을 동원해서 대우계열사의 수집에 나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 막대한 인수자금의 출처는 어디인가, 국방부의 군납과 관련해서 지금 심각한 의문이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교포신문에서는 여러 달 동안 이 문제에 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영전자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휴니드테크놀로지스사입니다. 96년3월13일에 대영전자는 주주총회에서 윤광석 전 LG전자 모니터 영업상무를 부사장에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 윤광석씨는 한국중공업의 현재 회장이고 과거 대우에 오래 근무한 윤영석씨의 동생으로 대영전자의 주식을 이 윤씨 형제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질적인 사주가 윤영석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國防部次官 朴庸玉** 저는 지금 모르겠는데요.

○**李信範委員** 윤광석씨나 이런 사람들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윤영석씨가 실질적인 사주라는 것을 국방부에서 알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또 사업에 있어서 조풍언 씨와 협력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國防部次官 朴庸玉** 저는 지금 금시초문입니다.

○**李信範委員** 그러면 조달본부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國防部調達本部調達管理部長 李賢根** 현재 저희들이 계약하면서 조풍언 씨와 윤광석씨와의 관계라든지 실질적인 사주관계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모르고 있고, 97년3월부터 작년 2월까지 윤광석씨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99년3월 이후 현재까지는 최영상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李信範委員** 문제는 방위산업체인데 실제로 누가 사주인지, 어떤 사람이 지배주주인지는 정부나 정보기관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셔야지, 만일 여기에 간첩이 침투하든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사주가 윤영석씨입니다.

그런데 운영석씨는 조풍언 씨의 고등학교 동기생이고 아주 절친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조풍언 씨가 대우계열사를 수집한 그러한 기업활동에 운영석 씨와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었고, 대영전자가 97년도에 국방부에 AM광송수신기를 납품하면서 개당 400달러하는 것을 900달러로 2배 이상 높여서 납품해 가지고 물의를 일으켰고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99년2월22일에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사실은 방산특조법 22조 1항에 따라서 방산업체 지정취소하는 것이 맞지만 공로를 인정해서 경고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밑의 조달본부에서 건의하기는 취소하는 것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현정부가 경고조치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뒤에도 많은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격을 조작해 가지고 47억원씩 회수된 업체가 그 뒤에도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고 많은 군수물자 계약을 하고 있고, 하필 그 회사의 실제의 사주는 운영석씨이고 운영석씨의 절친한 친구이자 비즈니스 파트너는 조풍언 씨이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 기입니다.

그런데 윤광석이라는 운영석씨의 동생이 사장으로 있던 98년8월에 470여만 달러를 외화밀반출을 하다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방산계약하면서 47억원을 회수당하는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렇게 큰 물의를 빚었는데 그 뒤에도 계속 많은 방산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혜가 아니라고 누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운영석씨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계약을 맺는지, 여기에서 조풍언 씨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차관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대영전자의 실질 운영 내막이나 조풍언 씨의 역할에 대해서 정부는 전혀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것 파악해야 됩니다. 조사해야 됩니다.

또 운영석씨가 조풍언 씨와 협력을 해서 대우에 오는 방산관련 사업을 대영전자로 빼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의 방산 업체들이 부실화됐다 물론 어떤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까마는 그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질의를 길게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보충질의하기로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 린다 김과 조풍언 씨와의 관계, 또 조풍언 씨와 국방부와의 역할 등과 관련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방부 자체에서도 조사를 해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국회가 앞으로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관해서 국방부가 과연 조사할 용의가 없는지, 이 점도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매항리 우라늄탄이라는 사진을 보니까 육안으로 보기에 상당히 아주 같아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 안드리니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韓英洙 李信範 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徐淸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淸源委員 제가 시간도 별로 없기 때문에 린다 김 사건은 중복이 많이 되니까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매항리 사건은 국방부에 꼭 짚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매항리 주민들이 인간의 기본권을 달라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사격장에서 불과 1.5km로 떨어져 있는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 또 거기에서 조개를 잡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예요.

그런데 이 분들이 이번에만 진정한 것이 아니라 88년부터 국방부나 관계기관에 진정을 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하나도 승소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국방부가 이런 식으로 대민관계를 처리한다면 우리 국민이 누구를 믿고 누구를 위해서 국가에 봉사 하겠느냐, 생업에 종사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 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대책도 가지고 있고, 조사도 한 것으로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서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SOFA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 환경문제도 한·미행협에 추가해서 더욱 신경을 쓰는 그런 자세로 국방부가 임해 달라 하는 두 가지의 말씀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韓英洙 徐淸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새천년민주당의 林福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福鎭委員 새천년민주당의 林福鎭 위원입니다.

제가 평소에 아끼는 국방부 장병들이 와 계시는데 그동안 노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 국회 국방위원을 8년을 했습니다. 지난 90년초에 제가 이 국회에 들어와서 국방위원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마 저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중요한 골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국방위원이 된 이후에 많은 동료, 선배위원들과 더불어서 주요한 국방의 방위력증강 사업을 국회로 끌어냈습니다. 그동안에 성역화되었던 이 문제가 국회에 나와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과 같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이것이 개혁대상에 올라서 많은 면에서 국방부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개선하고 또 개혁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년 국방의 전력증강사업이 국회에 또는 언론에 나와서 연례행사처럼 이 문제가 논의되고 또 군의 신뢰를 하락시키고 국민으로부터 상당히 언짢은 평가를 받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급기야 이번에 린다 김이라고 하는 로비스트가 언론에 등장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와 있습니다. 96년으로 기억합니다라는 로비스트 린다 김 문제는 국방위에서 처음으로 제가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방부가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껴서 매우 서운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96년 이후에 97년, 98년, 99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나 상임위를 통해서나 소위활동을 통해서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서도 했습니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정리해서 나가자고 하는 주장을 국방부가 지키지를 앓았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그랬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국방부는 이 국회의 의견에 대해서 또는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또 96년, 97년, 98년 매년 문제가 되었고 작년에는 소위를 열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국회가 관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언제나 이것을 피해갔는데 왜 그랬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왜 그랬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李信範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라는 솔직히 이 문제를 제가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그동안에 8년 지난 것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아쉬움을 느끼고 많은 갈등을 느낍니다. 과연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갈등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나라의 장래와 군의 장래입니다. 정말 국방부가 무언가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퇴임사에서 미국이 군산복합체여서 나라가 큰일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국회를 떠나면서 국방부가 방위력증강 사업에 대한 특별한 활로를 못 찾으면 이것 때문에 우리 군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경고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나라에도 이미 군산복합체가 단단히 뿌리를 박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개혁을 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로비스트 얘기를 했는데 그 뿌리깊은 조직, 커넥션을 정말 혁명하는 자세로 국방부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겠습니다라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해결 못합니다. 이 장비사업이 벌써 10년이 다 되었습니다. 10년 내내 많은 사람들이 인계하고 인계하고 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이 문제의 뿌리가 보통 깊습니까? 또 그때 일을 인계 받은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여기에서 장관이나 국회에서 검토를 하라고 질의했을 때 올라오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혁의지를 가지고 해결해 나가시기를 저는 여기에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한나라당에서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정권을 인수하는 자리에서 과거 정치권력과 연계된 모든 사업들을 그 정부하에서 해결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새로이 인수하는 이 시점에서 모든 부담을 털어버리자고 제가 요구를 해서 과거에 문제있는 이런 린다 김과 관련된

사업을 비롯해서 한 10여개 사업을 중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해결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를 않고 다시 또 이것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소위원회를 열자고 해서 또 브레이크를 걸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저만 속말로 해서 미움만 받은 것입니다. 도처에서 나를 견제합니다. 그러니 제가 이런 우려를 안하고 경고를 안할 수 있습니까?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제가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미 뿌리가 너무 깊어서, 저 林福鎮이가 8년간 주장을 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너무 많은 적이 생겼고, 너무나 많은 손해를 본 사람입니다. 앞으로 누가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나라를 위하고 군을 위하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논의를 하셔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기를 저는 상임위 마지막 부탁으로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두 번째, 매항리 사격장 문제가 여러 번 나왔는데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한미군에 관련된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잘못 처리되면 한·미간의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고 해서 국가안보상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신문을 보면 이 훈련장이 평수가 대략 700만평이 조금 넘어서 710만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MTC같은 훈련장은 8억 만평입니다. 그것이 적어서 지금 훨씬 키우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무기체계의 발전을 고려할 때 우리도 적어도 안전한 훈련장을 만들려면 1억만평 이상, 몇 억만 평의 땅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발전된 화학탄이라든지 심지어는 우라늄탄같은 것을 사용하는 이런 훈련장을 겨우 700만평 가지고 뭐를 합니까?

우리 군이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국내에서 찾을 수 있는 후보지를 찾아서 몇천만 평의 땅을 확보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무기체계도 검토하고 민간인에게 피해도 안 주는 훈련을 할 것 아닙니까? 돈 들여서 아시아 어디에 나가

서 훈련할 것입니까? 우리는 미국처럼 제2, 제3국에 가서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지 않습니까?

군이 훈련 안하고 어떻게 강군을 만듭니까?

어떻게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안하고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적어도 이 시점에 이 문제를 폭넓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최소한도 저는 차체에 지금 주변에 조그만 땅들을 다 팔아서 아주 안전한 곳에 큰 덩어리의 훈련장을 우리가 최대한 확보하고 종합적으로 여기서 사용하시고 적어도 미군이 쓰는 훈련장은 우리 한국군이 인수해서 한국군 이름으로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민들에게 모든 문제들을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군한테 돈을 받든지 협조를 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미군 훈련장을 우리가 쓰는 일은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적어도 나는 그것을 국방부에 제안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때 그때 문제가 나면 겨우 접근해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된다, 계속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라늄 문제도 제가 국회에서 국방위를 통해서 여러번 지적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미 본토에서는 훈련을 못하는데 왜 우리 한국에서는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입니다.

한국이 원자력을 관리하는 데서 사용하는 법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방사능관리법이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미군들의 탄약시설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경고할 수 있어야 되고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차체에 국방부가 그런 면에서 접근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8년 동안 국방위에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우리의 국방력 발전을 위해서 우리 안보의 능력 고양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고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에게 너무 힘들게 한 적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상

임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린다 김이라고 하는 사건이 자칫 잘못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여러 가지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좋은 전환의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韓英洙 林福鎮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許大梵 위원이 질의하시기 전에 徐淸源 위원께서 백두사업에 관한 문제, 또 鄭在文 위원, 金宗鎬 위원, 河舜鳳 위원이 서면질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서면질의를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許大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大梵委員 한나라당 許大梵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오늘 이 회의가 15대 국회 국방상 임위 마지막 회의이고 또 본인도 마지막 자리인 것 같아서 작별 인사겸 말씀드리겠습니다.

15대 국회의원으로서는 4년 동안 여러 가지 부족한 본인이 우리 군에 대해서 때로는 비판과 충고 그리고 질책도 많이 했습니다. 본인의 이러한 충고와 질책이 군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군을 사랑하는 충정어린 마음과 군의 발전을 위해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또 발전적인 유익한 사항이 있다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국가의 튼튼한 안보와 우리 군의 발전 그리고 후배 장병 여러분의 무운장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韓英洙 국방 현안에 관해서 국방부의 보고를 받고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국방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인데 국방부에서 1시간쯤 답변준비를 위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許大梵 위원의 마지막 고별인사 또 아까 새천년민주당의 林福鎮 위원도 아주 우리 가슴을 울리는 그러한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 국방위원회는 15대 국회의 마지막 위원회가 됩니다.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인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 질의하신 것에 대한 1시간 뒤의 국방부 답변을 듣는 것이 국회의 입장에서나 질의한 위원들의 입장에서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

늘 위원들의 질의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는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우리 15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그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최근에 린다 김의 로비사건으로 인해서 세간의 관심이 된 것은 아닙니다. 14대 때부터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여를 하신 분이거나 지난 정권 교체가 될 무렵에 정권인수위원회에 관여했던 분들도 이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 사건을 비롯해서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해서는 98년도 정기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시 제기가 되고 하루로 끝내지 못하고 다시 국방부측에 명확한 답변을 요구해서 이들을 한 기억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뒤에 도저히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진실을 밝힐 수가 없다고 보고 우리 국방위원회가 방위력개선사업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10차례 비공개회의를 했습니다. 10차례 비공개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는 소위원들의 발언에 대한 속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의 절차에 의해서 필요한 시기에는 소위원들의 발언을 공개할 그러한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소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지난번에 보고를 받아서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 방위력증강사업을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에게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소위원회는 위원장은 새천년민주당의 林福鎮 위원이 담당을 하고 한나라당의 許大梵 위원, 朴世煥 위원, 河璟根 위원 그리고 새천년민주당에서 張永達 위원, 朴尙奎 위원 그리고 자유민주연합에서 李東馥 위원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소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지루하시더라도 간단하니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열 차례에 걸친 소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소위원들은 해외무기 도입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해소하고 무기체계 획득의 투명성 전문성 책임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특히 국제계약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민간 전문인력 활용, 각종 무기체계 획득협상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무기체계 획득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국방부가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소위원회는 의사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결정과 기종선정 경위 등에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금 이것이 문제입니다. 기종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결정에 대해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그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무기체계 획득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방부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장군 명군 식으로 해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몇몇 위원이 제기한 대로 이 방위력 개선사업에 대한 의혹은 16대 국회로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15대 국회의 전체 국방위원회에서 이 합의사항이 받아들여지고 국회 본회의에 넘긴 이상 이 여러 개의 사업에 대한 의혹은 16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나 수사기관의 수사에 의해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는 이유는 국방부가 오늘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답변을 준비하도록 주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방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委員長 韓英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방부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防部次官 朴庸玉 답변드리겠습니다.

徐淸源 위원님, 鄭在文 위원님, 金宗鎬 위원님, 河舜鳳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지적과 논평을 들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로서도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결론으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의껏 저희들의 입장을 그대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朴世煥 위원님과 安東善 위원님께서 백두사업 선정당시 국방장관 등 고위공직자들이 부당한

영향력을 구사했는지에 대해서 국방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機種決定은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또 제반 기록을 확인해 볼 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즉 밟게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그대로 다 밟고 밟으면서 토의할 것은 토의했다는 뜻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결론적으로 이루어진 사업들이 지금까지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뜻에서 정상적인 추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불법한 로비자금이 거기에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 국방부 관계자들이 실제 그 일에 가담해서 로비를 받거나 가담을 해서 참여한 사람 외에는 이것을 확인할 방도가 기록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가 어떤 영향력을 실제로 행사했느냐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朴世煥 위원님께서 린다 김이 30억원을 국내 반입한 사실과 관련 뇌물수수용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기무사나 군검찰의 수사노력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30억원 유입에 대한 지출내역 조사결과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委員長 韓英洙 차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대개 위원들의 질의가 중복된 부분이 많습니다. 결국은 백두사업하고 매항리 사격전 사건하고 또 독특하다고 하면 李信範 위원 질의하신 부분하고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국방부의 입장을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자리에 안 계신 위원들은 본인들이 원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國防部次官 朴庸玉 알겠습니다.

朴世煥 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張永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국방부 훈령으로 되어 있는 국방획득관리규정을 법제화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방부는 투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79년에 무기체계 및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절차를 국방부 훈령으로 지적한 이래 지금까지도 그러한 규정을 개정해 가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고 있고 획득관련 조직의 변경과 급변하는 무기도입 환경 등이 획득과정에 적시적이고 탄력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방부 훈령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도 획득관리규정이 1971년에 국방성 훈령으로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도 이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음을 첨언해 드립니다.

朴世煥 위원께서 KFP 사업의 기종결정과정을 예로 드시면서 실무자 및 소요군의 의견수렴을 확대하고 무기체계선정 책임을 각군총장에게 대폭 위임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규정 및 제도를 개선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실무자와 소요군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방부는 금년 1월부터 국방획득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소요군의 실무자는 물론이고 국방부, 합참, 조달본부, ADD 등 관련부서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추진팀을 구성하였고 필요시마다 수시로 회의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외도입사업 계약시 로펌이나 민간전문용역기관, 민간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국방조달자문위원 등을 운용토록 제도를 보완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기체계의 기종결정을 각군총장에게 대폭 위임하는 방안도 제의하셨는데 그 방안은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2개군 이상이 관련된 사업이나 기술이전 및 국산화 등 방위산업 정책과 깊이 관련된 대형사업 그리고 사업의 성격상 질의차원에서 특별관리가 요구되는 일부사업은 국방부에서 수행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은 각군에 위임하여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朴世煥 위원님께서 국방부 특명검열단의 부활을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군 특명검열단은 율곡감사, 임전태세검열, 예비군감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69년에 창설되어서 95년 해체 전까지 자주국방력 건설을 달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검단에 부여된 기능들은 대부분 다른 조직기능과 중복되었기 때문에 유사기능 통·폐합 조치의 일환으로 임전태세 검열기능은 합참 전비태

세 검열실로 예비군 감사기능은 동원국으로 통합시켰고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율곡감사는 합법적인 감사기능을 갖고 있는 국방부 감사관실로 통합한 것입니다.

따라서 특검단에서 수행했던 기능은 이관된 부서에서 분산 수행 중에 있으며 조직의 슬림화, 유사기능 통·폐합 등 국방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방부 특명검열단의 부활을 고려한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하는 판단입니다.

참고적으로 특정사안에 대해서 장관의 특명사항이 있을 시에는 현재도 감사관실에서 검열의 성격에 따라 전비태세검열실 요원 및 각군의 감찰감실 요원을 지원받아 전부대 및 기관에 대해 검열을 수행토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朴世煥委員** 감사관실이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외부적으로 비치는 활동이 나타나지를 않고 또 국방부의 군수비리가 계속해서 근절되지 않고 가다 보니까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옛날처럼 특검단을 부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이것은 본인의 의견이라기보다도 여러 사람들이 새로운 장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요구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國防部次官 朴庸玉** 알겠습니다.

朴 위원님께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실명제의 확대 실시방안에 대한 국방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張永達 위원님께서도 물으셨으므로 양해하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작년 1월부터 무기체계 획득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8개의 각종 협의체를 3개로 대폭 축소·조정하였고 모든 획득사업 추진시 사업실명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실명제는 무기획득사업의 추진단계마다 의사결정에 참여한 모든요원의 인적사항 및 서명일자들이 포함된 사업관리이력서를 작성한 후 전자문서화하여 영구보존하고 위원회 개최시에도 참석자들의 명단과 의견 등을 모두 기록하여 직접 서명을 받도록 하는 등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방부가 도입한 사업실명제는 사업추진 전 단계에서 의사결정 관련 모든 참여자들을 망라하기 때문에 최대한 확대된 사업실명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확대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욱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世煥 張永達 위원님께서서는 화학무기 폐기시설에 대한 안전성과 환경오염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미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지난 15일 환경단체 민간단체, NGO, 이 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이 다 같이 가서 보았습니다. 가서 본 판단이 지금의 시설상태는 과도할 정도로 많이 설비되었다, 이것이 실제 가동할 때 다시 와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실제 가동할 때 다시 이 단체들을 참여시켜 확인시키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朴世煥 위원님께서서는 북한의 CWC 화학무기금지 기구가입 유도활동을 강화하고 아국의 자구책 강구 등 북한과의 군사력 균형유지를 위한 대비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북한의 CWC 가입유도를 위해서는 화학무기금지 기구 즉 OPCW를 통해서 협약의 보편성 결의안을 채택하고 또한 각종 대화채널을 통하여 북한의 CWC 가입을 지금 적극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도 앞으로 ARF에 가입되게 되면 이 기구를 통해서도 아마 적극 촉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비해서 대북 억제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이 이를 사용할 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방호능력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또 朴世煥 위원님께서서는……

○**朴世煥委員** 그 문제는 군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던 많은 예비역 장성들이 이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그런 분위기를 좀 알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國防部次官 朴庸玉** 알겠습니다.

朴世煥 위원님께서서는 정치인관련 병역비리 수사는 총선용으로서 병무비리 수사대상에 오른 정치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공개적으로 사과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국방부는 병역비리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군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여 지속적으로 비리척결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어떠한 성역도 인정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금년 1월19일 반부패국민연대가 119명의 병역비리 의혹대상자명단을 제기해 옴에 따라 2월14일 민간 검찰과 합동으로 병역비리합동수사반을 설치하여 본격 수사에 착수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119명

의 병역의혹대상자 중에는 정치인 자체의 군 면제 비율이 일반인 면제비율보다 높고 병역비리에 대한 사회 지도층의 책임이 크게 논의되었기 때문에 정치인관련 부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고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사진행간 정치인 자녀들에 대해서는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고 또다른 의혹을 야기시키지 않기 위해 구체적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한 그 명단을 공개한 사실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煥 위원님께서서는 매항리 주민 이주에 따른 보상과 이주방안 그리고 미 공군사격장 이전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徐淸源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질의를 하셨으므로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이주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보상이 충분치 않아 해결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일부 주민들의 이주거부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이주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하도록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고 계속해서 주민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매항 1리, 5리 한 238세대 중에 32세대만이 반대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하겠습니다.

미 공군사격장은 1955년에 설치되어서 운영해 온 미 공군의 유일한 사격장으로 기지와 근접하고 대민피해 최소화 및 기상 영향 가장 적게 받는 적합한 장소로 선정된 훈련장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사격장 선정의 어려움과 이전대상 지역주민의 반대로 사실 사격장 자체 이전은 대단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미 연합전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사용과 유지가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신 이전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世煥 위원님께서서는 쿠니스격장과 관련한 한·미간 공대지미사일사격장 양해각서 유무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고온리 미 공군사격장은 SOFA 2조에 의거해서 공대지 사격장용으로 공여되어서 지금까지 미 공군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미군 전용사격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현재 한국공군과 미공군 사이에 기지사용에 관한 어떠한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이 없습니다.

○**朴世煥委員** 없습니까?

○**國防部次官 朴庸玉** 예, 그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8일 미공군기의 폭탄투하로 재개

된 민원발생과 관련해서 한·미 합동조사를 18일부터 20일까지 합니다. 해서 주민피해가 확인되면 보상하고 또 앞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미측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世煥 위원님과 安東善 위원님, 李信範 위원님께서 미 공군 A-10기가 고온리 사격장에서 우라늄탄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8일 미 공군기는 엔진고장으로 인하여 탑재중인 MK-82라는 폭탄, 500파운드짜리쯤 됩니다. 이것 여섯발을 고온리 사격장에 투하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온리 사격장은 오직 연습탄만 사용할 수 있는 사격장이고 또 비상상황시를 제외하고는 고폭발성 실무장 투하는 근본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격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A-10 비행기가 군산 앞바다에 있는 직도 실무장 폭탄투하훈련이 가능한 곳으로 가다가 엔진고장 때문에 비상조치수단으로 농도에 떨어뜨린 것입니다. 이 A-10기 우라늄탄 사용과 관련한 주한미군사령부 발표에 의하면 주한미군은 고온리 사격장에서 이제까지 감손우라늄탄을 사용한 적이 없고 또 연습용 우라늄탄이라는 것은 지금 없다고 발표했는데 내일 오전 중으로 아마 주한미군 측에서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이 문제를 밝힐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제도 TV에 나왔지만 연습탄을 보여주면서 BDU 이것을 Bomb Depleted Uranium 감손우라늄탄인 연습탄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Bomb Dummy Unit라는 모의탄을 어떤 미국 사람도 와서 지금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전혀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온리 사격장이 문제에 관해서는 내일 오전에 주한미군 측에서 공식으로 발표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朴世煥 위원님께서 매향리사건 등으로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SOFA 개정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의 입장을 질의하셨습니다. 安東善 위원님, 張永達 위원님 또 徐淸源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취지의 질의를 주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SOFA 개정과 관련한 정부입장은 현재 국민정서와 시대적 상황을 잘 알고 있고 또 한·미 동맹관계의 발전 등을 고려해서 조기에 타결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또 미측도 한·미 동맹관계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서도 조기타결하기를 희망하

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무부가 주무부가 되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여덟 차례의 공식협상과 비공식협의를 계속해서 지난 5월에는 양국간 전문가회의를 개최한 바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인 형사 재판권 내용 중 신병인도 시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접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徐淸源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환경보호문제 이 문제는 저희들이 SOFA합동회의에서 이미 정식 의제로 그것을 채택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방부는 이 SOFA협약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소기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강구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국방부도 가만히 있지 않고 항상 외무부 못지 않게 이 SOFA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장관 회담이나 여러 정책협의채널을 통해서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측은 아마 조만간 고위실무팀을 서울에 파견해서 SOFA 개정협상을 계속하여 조속히 해결하는 방향으로 공동 노력하기로 이미 합의되어 있습니다.

○**朴世煥委員** 국방부에서도 불평등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시인하고 있지요?

○**國防部次官 朴庸玉**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부정하지 않습니다.

安東善 위원님께서서는……

○**朴世煥委員** 지금 넘어가는 모양인데 국방부 백두사업과 관련해서 국방부 주장하고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군사평론가의 주장이 자꾸 언론이나 보도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국방부의 해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아까 요구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國防部次官 朴庸玉** 알겠습니다. 앞의 모든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安東善 위원님, 河璟根 위원님, 張永達 위원님께서 민수용 호커800 항공기 선정경위와 호커800 SIG 그리고 호커800 RA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4년9월 확대 심의회의를 통해서 관련 기관·부서의 의견을 토대로 주장비 회사에서 주장비와 체계결합이 가능한 항공기를 선정하여 시험평가 및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패키지화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장비회사로부터 업체의 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미국과 이스라엘 회사는 호커800 불란서 회사는 싸이테이션-III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험평가 및 협상결과 가격은 다소 비싸나 아까 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운영 중인 정보체계와의 연동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E시스템사의 장비를 선정했고 또 호커800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커800 항공기가 민수용으로 개발된 것은 사실이지만 생존성장비 등 군용장비를 장착해서 미국, 영국, 일본 등 23개국에서 현재 군용으로 운용 중에 있는 항공기입니다.

또 호커800 SIG 및 호커800 RA는 확인결과 항공기 제작회사에서 모르는 항공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이 확인해서 판단해 보면 우리가 백두·금강 항공기를 주문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인연감같은데 SIG, RA가 오더드 바이 코리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없는 비행기인데 아마 우리가 개발하는, 주문생산한 비행기의 이름이 없으니까 이렇게 붙인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安東善 위원님 질의는 지나가겠습니다.

河璟根 위원님께서 백두사업계약과 관련하여 무역대리점 등록절차 준수여부와 백두사업관련 레이시온사의 무역대리점이 윤일통상에서 IMCL로 변경된 배경, 부적격업체인 윤일통상과 무역대리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린다 김이 백두사업계약에 참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96년 백두사업 계약 당시 무역대리점 등록 절차는 조달본부 군납업체 규정에 의거 외자등록신청서, 갑류무역대리점 신고필증 등 5개 서류를 제출 받는 것으로서 윤일통상과 IMCL의 제출서류를 검토한 결과 양개 업체 모두 적격 업체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초 윤일통상에서 IMCL로 무역대리점이 변경된 사실은 미국 레이시온사로부터 98년 접수한 서한에서 레이시온사를 대리하는 업체가 IMCL로 변경되었음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된 배경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두사업과 관련하여 린다 김은 각종 등록서류와 계약서를 검토해 본 결과 직접적으로 계약에 참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河璟根委員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96년도에 백두사업이 계약이 되었을 때는 린다 김이 가지

고 있는 회사는 등록이 안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등록조건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보니까 32개인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는 안 되어 있고 98년 1월달인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설명으로는 그것이 설명이 안되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누굽니까?

○國防部調達本部調達管理部長 李賢根 조달관리부장입니다.

96년도에 윤일통상으로 에이전트가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IMCL이 에이전트로 등재된 해는 98년1월입니다. 그런데 에이전트가 변경된 것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통지받기는 98년5월22일날 레이시온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그때부터 에이전트는 윤일통상에서 IMCL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河璟根委員 그런데 96년에 백두사업이 추진될 때 지금 지상에도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린다 김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린다 김이 아니고 윤일통상의 최윤식인가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혀 다른 사람이예요.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國防部調達本部調達管理部長 李賢根 지금 말씀하신 린다 김 관계는 윤일통상이든지 아니면 IMCL이든지 어디든지 나타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에이전트와의 계약서 같은 데 보면 전부 다른 대표자의 이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河璟根委員 그런데 96년 백두사업 관계는 린다 김이 한 것으로 보도되어 있고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그렇게 설명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린다 김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98년 정월달에 등록이 되고 그 전에는 최윤식이라고 하는 사람의 회사에서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國防部調達本部調達管理部長 李賢根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나 하면 백두사업계약이라는 것이 에이전트는 중간 역할밖에 안 합니다. 린다 김이 했다고 하더라도 이름이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외국업체와 조달본부간에 직접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하고 중간 에이전트의 역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河璟根委員 그러면 96년에 계약했던 윤일통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國防部調達本部調達管理部長 李賢根 윤일통상은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단지 나타나는 것은 레이시온사와……

○河璟根委員 그런데 왜 96년도 백두사업을 린다

김이 했다고 그래요?

○**國防部調達本部調達管理部長 李賢根** 에이전트를 대신해서 로비활동을 한다 김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류상으로 계약서에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河璟根委員** 그러면 신문에 보도될 때도 그런 정도는 국방부에서 이해가 된다고 하면 국민에게 이해를 시켜야지 제가 처음 이것을 서류상으로 보았을 때는 이 이면에 엄청난 무슨 음모가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96년에는 린다 김이라는 사람이 전혀 전면에 나타나지 않고 린다 김의 회사는 98년에 등록이 되고 또 96년에 보니까 326개인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없어요. 그런 것을 제가 여기에서 그 이상은 따지지 않겠습니다마는 분명히 해주세요.

○**國防部次官 朴庸玉** 알겠습니다. 그런 점들은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河璟根 위원님께서서는 항공기와 주임무장비 결합시 작전 안전성이 의문시 되며 항공기 탑재중량이 제각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백두항공기인 호커800의 연료를 제외한 총중량은 8,369kg으로 미 연방항공국의 승인된 중량입니다. 이중 기본항공기 중량 6,316kg을 빼면 탑재 가능한 중량은 2,053kg이 됩니다. 항공기에 탑재되도록 계획되어 있는 장비 및 인원은 조종사 2명입니다. 총 1,687kg으로써 항공기 탑재가능중량에서 빼면 366kg의 여유중량을 확보하게 됩니다.

현재 백두장비는 체계결합 중에 있으며 제작회사에서 탑재장비 설치대 및 각각의 단위장비에 대한 경량화된 재질을 적용하여 최대탑재중량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지속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자료 제출시마다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임무장비와 체계 결합된 백두항공기는 국내·외 수락시험과 미 연방항공국의 재승인 절차를 거쳐야 운항이 가능하기 때문에 탑재능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河 위원님께서서는 소프트웨어 부분의 문제 개선대책이 미흡함을 지적하시고 그 추진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관련 주미사업단실 요원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총 6명 중에 소프트웨어 관련 요원을 2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 1명이 육군대위로서 미 텍사스공대에서 정보체계관리 석사학위를 취

득하고 정보처리기사 1급 등 4개의 관련분야 자격증을 취득해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직접할 수 있는 전문요원이고 또 1명은 육군대령으로 미 루이지애나대학에서 전산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요원으로 주미사업실장을 겸하고 있어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과정에서 주미사업실에서는 약 40회의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회의에 참석하여 미 정부 및 제작사 관련 요원과 토의를 거쳐 주요 체계, 요구사항의 반영여부를 확인해 왔고 또 수요부대의 작전보고서의 주요기능 및 소프트웨어 간 연동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금년 2월말 수요부대 작전 운용 전문요원이 소프트웨어의 한국적 환경요건 충족 및 효율성을 보유함을 확인하였으며 타 체계에 비하여 사용이 간편하고 단시간 내에 숙달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용요원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河璟根 위원님께서서는 군 내부에 적용할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용산정지침 수립 추진경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국방부는 99년7월에 국방대학원으로 하여금 국방정보체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도록 해서 작년 12월에 연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현재 연구내용을 보완하여 국방정보체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용산정 지침(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이 지침이 작성되는 대로 금년 하반기 중에는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河璟根委員** 제가 그 문제를 지적한 것은 지금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U-2기에 대한 것을 우연히 보니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 문제를 알고 있는지 그런 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지금 차관님 말씀대로 충분히 연구가 된다고 하면 문제가 아닌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생각보다도 엄청난 돈이 든다고 하는 것을 명시하셔야 될 것입니다.

○**國防部次官 朴庸玉**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河璟根 위원님께서서는 계약 체결 당시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비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키지 못한 이유와 미 업체가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백두체계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는 제작회사의 고유기술로 어떠한 무기체계에서도 관련 기술을 제

공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 이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무기체계는 임의로 업그레이드도 할 수 없고 이것은 다른 무기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백두체계가 첨단인 복잡한 컴퓨터 장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운용하고 정비 관리 유지하는 능력을 완벽하게 습득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운용 및 정비요원의 교육은 절충교육으로 해외교육을 통해서 완전 습득하도록 하고 있고 미측 기술요원이 또 2년간 한국에 상주해서 지속적으로 한측 요원에게 기술을 전수하여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하고 있습니다.

미 제작회사의 무리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군내의 소프트웨어 전문가 및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의 자문을 얻어서 그 타당성을 확인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또 河璟根 위원님께서서는 품목확정회의 추진경과 및 CSP 지원장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백두체계의 원활한 운영보장을 위한 수리부속 지원장비의 소요판단을 위하여 미측으로부터 8회에 걸쳐 자료를 접수하여 98년 12월에서 99년 9월까지 미측 추천 품목 가격현황 분석 및 요소별 제시자료의 신뢰도 가격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소요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한미간 적정소요 및 품목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2회에 걸친 품목확정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1차 품목확정회의는 99년 5월 중순에 실시하였으나 미 업체의 준비가 미비해서 동년 7월 중순 미 업체에서 경비를 부담하여 재실시했습니다. 소요 검토는 국방부 지침에 의거 수리부속 소요 산출용 국방 표준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주입무장비 중 CSP 343종 436점, 지원장비 46종 94점과 항공기 CSP 410종 2,485점, 지원장비 63종 110점 등 총 862종 3,125점을 산출함으로써 미측에서 제시한 금액 대비해서 약 570만불 정도를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또 河璟根 위원님께서서는 백두체계의 항공기와 동일기종을 중국이 보유할 때 방공체계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동일 기종이 중국에 갔는지 그것은 확인을 해보아야 될 사항인데 설령 동일 기종이 갔다 하더라도 주장비

가 한국은 완전 별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보안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張永達 위원님께서서는 백두사업 로비문제를 재수사할 수가 있는지,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고 또 李信範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주셨으므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河璟根委員 아까 질의한 것은 레이스온사 발표에 의하면 HAWKER 800XP 같은 것을 중국에 98년 이후부터 준다고 하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防部次官 朴庸玉 확인하겠습니다.

린다 김 사건을 포함한 백두사업에 관하여는 기무사와 검찰이 수사를 실시하여 사건 관련자를 기소 처리하는 등 사법조치를 했고 린다 김을 포함한 일부 관련자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수사결과 기종선정 등 백두사업의 로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는 지금 수사결과상으로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밖에 범죄혐의를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나 자료가 지금 현재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런 상태에서 지금 재수사를 다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張永達 위원님께서서는 權起大 이화수 등도 백두사업 추진상 문제점을 제기하다가 오히려 불이익 처분됐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 해명되어야 된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전 백두사업 주미사업실장 이화수 대령은 94년 7월에서 98년 9월 린다 김으로부터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슬롯머신 게임비, 여비 명목으로 200달러, 미국 LA 인근 골프장에서 골프장 사용요금, 호텔 숙박비 명목으로 540달러 등 수차례에 걸쳐 미화 1,000달러 상당의 향응과 현금 300만원 등 금품을 수수하면서 97년 7월에서 8월 사이에는 백두사업 상세설계 검토회의 결과 백두사업 관련 한미회의 결과 등 백두사업 진행상황을 린다 김에게 구두로 전해 줌으로써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군기법 13조 업무상 누설죄 형법 129조 수뢰죄로 선고유예 및 추징금 200만원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전 9125부대 체계관리과장 군무원 1급 權起大는 95년 12월에서 97년 12월 린다 김으로부터 백두사업 원활추진 명목으로 1,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여 형법 129조 수뢰죄로 기소되어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1,200만원이 선고된 바가 있습니다.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백한 군기누설혐의 및 수뢰혐의로 처벌을 받은 것이지 백두사업 추진상 문제점을 제기하다가 불이익을 당해서 처분받은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張永達 위원님께서서는 무기사업 관련 정보공개와 무기 전문가 양성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방부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국방부는 무기구매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키되 공개할 것은 과감히 공개한다는 방침으로 현재 투자사업 관련 부서의 비밀 등급을 대폭 완화하고 중기계획의 열람본을 작성하여 비치토록 하는 등 투자사업 정보공개 확대방안을 마련해서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획득업무 전담책임제와 사업실명제를 도입하고 계약 및 획득관련 문서는 전자문서화하여 영구 보존토록 하는 등 아까 이미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또 무기체계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방위력개선 전문 정책요원을 체계적으로 지금 양성하고 있고 획득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방대학교에 국방사업관리과정을 신설해서 교육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획득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張永達 위원님께서서는 97년 화학무기금지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가입국은 10년 내에 화학무기를 폐기토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조치사항은 무엇이나 질의하셨습니다.

정부는 97년 4월 CWC, 즉 화학무기금지협약에 가입하여 관련 의무를 지금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화학무기 보유 및 폐기에 관한 문제는 지금 공개적으로 답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개별적으로 대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信範 위원님께서서는 백두사업 추진시 Laurel사의 국방부 등록 여부와 조풍언 씨 개인에게 특혜를 제공하였는지 그리고 조풍언 씨가 ITT와 거래하면서 몇%의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조풍언 씨에게 거래를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Laurel사는 국방부 조달본부에 등재되지 않은 업체이고 조풍언 씨도 무역대리점 대표자로 조달본부

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방부 조달본부는 계약체결 해외 업체와 직접 체결하고 있고 무역대리점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조풍언 씨에게 어떤 특별한 특혜를 준 것은 없습니다.

해외 업체와 무역대리점간의 중개수수료와 관련 사항은 양자간의 직접거래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국방부는 관여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미 ITT사의 국내 무역대리점은 조달본부에 유포상을 대표자로 등록한 기흥물산이고 조풍언 씨와의 거래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조달본부에서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李信範委員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기흥물산이 98년에 달러로는 102만 달러지만 원화로는 약 13억6,000만원 정도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업계의 34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9,770만 달러로 원화로 치면 1,150억원 정도의 무기계약 실적을 올려서 국내 무기대리점 업계실적 3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 계약건수로 보면 98년에는 2건에 불과하던 것이 99년에는 6건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ASPJ 전과교란장치 항공기 자체방어장비 이 프로젝트는 4,875만 달러로 상당히 액수가 큰데 물론 다른 제품에 비해서 여러 가지가 우수했다 이렇게 판정을 하셨겠습니까마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16대 국회가 되더라도 이것에 대한 근거를 자세히 제시해서 의심을 받을 만한 사정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ITT사에서 커미션으로…… 아까 제가 드린 서류에 보면 4% 내지 7%인데 이와 같은 액수이면 5%의 커미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흥물산이 중간에 중개를 했는데 커미션은 왜 조풍언 씨가 받았느냐, 이것은 정말로 이상한 얘기입니다. 조풍언이라는 사람이 우리 나라 국세청에 신고를 했거나 또는 미국 국세청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ITT사의 주장은 자기네는 해외에서 합법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풍언 씨는 지금 국내에서 합법적인 활동을 전혀 한 게 없지 않습니까? 등록도 안 했고 기흥물산의 임원이나 대표자로 등재도 안 되어 있고 지금 불법적인 활동을 했다고 상당히 의심을 살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ITT사에다가는 해외에서의 불법활동에 관여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가지고 계약서에 붙여놓았습니다. 기흥물산도 또 그것을 썼습니다.

그러면 기흥물산과 조풍언 씨 사이에 어떤 어떤 합의가 있는 것인지 조사해 보셔야 되지 않아요? 조풍언 씨 신원도 지금 확실하지 않은데 이 분이 대통령의 일산 집을 등기한 데 보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서 한국사람 행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는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행세를 합니다. 이렇게 이중국적자인지 미국국적자인지 신원도 불분명한 사람한테 대북과 관련해서 기밀을 유지해야 될 사안도 있을 텐데 이런 거래를 맡긴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이나 하는 점에서 제가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國防部次官 朴庸玉** 예, 알겠습니다.

李信範 위원님께서서는 대영전자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영전자의 실질적인 사주가 윤영석 씨로 알려져 있으나 지금 사실여부는 확인된 바가 없고 97년3월부터 윤광석 씨가 대표로 되어 있었고 99년3월 이후 현재까지는 최영상 씨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풍언 씨의 대영전자에서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는 조달본부에서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李信範委員**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도 윤영석 씨가 과연 무슨 돈이 있어서 대영전자의 지배적인 주주가 되는 동생들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5% 이상 주식을 소유한 또 한 사람은 황주명 변호사입니다. 이 분이 또 상당히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데 황주명 윤영석 조풍언 이 사람들은 다 경기고등학교 동기생들입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친분관계가 아주 돈독했던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 군납을 하면서 국방부로부터 경고도 받고 또 취소도 될 뻔한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질렀으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생 윤광석이라는 대표는 외화 470만 달러를 밀반출해 가지고 구속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물의를 빚었으면 어떤 제재를 받아야 되는데 계약된 것을 보면 제가 지금 인터넷에서 뽑아본 것만 해도 상당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풍언이라는 사람이 뒤에서 뭔가 작용한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대영전자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앞으로 밝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영전자의 활동에 대해서는 여권실세들의 정치자금원이 아니냐 또는 정치적인 어떤 부패와 관련된 것 아니냐 등 여러 가지 의혹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는 이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호지부지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國防部次官 朴庸玉** 예.

그러면 이것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河璟根委員** 추가로 CN-235에 대한 간단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대응무역 관계인데 지금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대응무역으로 살 수 없다고 하는 서한을 우리에게 보낸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國防部獲得室長 文一燮** 인도네시아에서 보낸 서신에는 살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응구매계약을 할 의향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자기들 주무부서, 우리 같으면 재경원에서 예산이 아직 할당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할당되는 대로 바로 계약하겠다 그리고 이번 5월29일부터 6월1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1차 방산군수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응구매를 해야 될 품목은 그때 결정하겠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河璟根委員** 거기에 추가해서 지금 IPTN을 미국의 보잉사나 스페인의 카사사가 사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國防部獲得室長 文一燮** 그것도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河璟根委員** 지금 알려진 바로는 IPTN이 IMF의 판정을 받아 가지고 도저히 회생할 수가 없고 IPTN이 합의부가 있을 때 IPTN이지 지금은 도저히 지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의 보잉사나 스페인의 카사사가 사려고 하는데 실제 오퍼하는 돈이 불과 기천만불이에요. 그러나 IPTN에서는 한국에 CN-235의 계약을 미끼로 해가지고 수역불을 달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 중간에 네고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전제로 해서 실제로 우리가 CN-235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언제 가능하느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잉사가 사든지 카사사가 사든지 해야 그것이 가능하지 지금 인도네시아의 IPTN사에서는 결코 그 능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있게 말씀하시지만 IPTN사의 능력에 대해서는 제가 1년 전부터 지적을 해왔는데 아마 앞으로 제 이야기가 좀더 무게가 실릴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백두사업단장에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李養鎬 장관께서 보낸 그 연서를 아까 李東馥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정인물이 되었건 혹은 린다 김 자신이건 그것을 공개해 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졌는데 그 이유를 국방부에서 혹시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또 최근에 린다 김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여유만만하게 기자들도 만나고 있는데 그런 태도에 대해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그런 시각에서 이 문제를 풀면 린다 김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國防部白頭事業團長 梁致奎 죄송합니다마는 저의 생각은 이 장비를 어떻게 하면 잘 확인해서 잘 운영해 줄 것인가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國防部次官 朴庸玉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파악한다는 것이 저희 국방부 관계자들로서는 큰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입니다.

○河璟根委員 그런데 오늘 보고에서도 그간 수년 동안 지적된 것이 전혀 반영된 것처럼 보이지 않고 대단히 안이하게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린다 김 사건의 이면에…… 이번엔 린다 김이 그렇게 만든 것은 사실 돈을 주고 받은 법적 문제가 크게 대두될 가능성이 크고 또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이 돈을 달라고 조이니까 아까 李東馥 위원의 이야기대로 그것을 회색시키고 염문관계를 가지고 이 문제를 확대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李養鎬 국방부장관도 그 유희에 같이 놀아난 사건으로 보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첫 걸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韓英洙 이제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안 계시면……

○李信範委員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韓英洙 예.

○李信範委員 아까 제가 하려다가 안 했는데 대영전자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이것입니다. 대우라는 큰 회사가 망했는데 그 회사의 국내 총괄회장을 하던 운영석이라는 사람이 아주 잘 되는 방위산업체를 가지고 있다 또 그 사람이 공기업인 한국중공업의 회장으로 계속 앉아 있다 이것을 과연 그럴 수 있다고 어떻게 국민이 생각할 수 있느냐는 것입

니다. 국방부가 대영전자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설명을 해주어야 됩니다. 대우는 망했는데 전문경영인은 좋은 회사를 차고 앉았더라 하는 의혹, 그리고 그 의혹의 뒤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조풍언 씨가 ITT로부터 받은 커미션에 대해서는 기록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슈피리어 코트(LA County Superior Court)로 되어 있는데 아마 다음 주쯤에 어느 공장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정확한 액수가 LA법원에 제출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방부 측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좋은 표본으로 삼아서 앞으로 무기거래할 때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활용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린다 김과 조풍언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12시 경에도 린다 김과 제가 통화를 시도했습니다마는 동생하고만 통화를 하고 통화를 못 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경로로 물어보시면 그 두 사람이 협력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린다 김과 조풍언 씨와의 관계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필요하면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朴世煥委員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방부의 현안문제들이 16대 국회로 많이 넘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백두사업이 16대로 넘어갈 것 같은데 향후 사업추진 계획을 보면 금년 5월에 1호기에 대한 수락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7월과 12월, 내년 2월과 3월 국내 수락시험을 거쳐서 백두체계를 내년 4월에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확실히 이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國防部白頭事業團長 梁致奎 예,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國防部獲得室長 文一燮 지금까지 사업평가단이 계속 다녀온 보고에 의하면 성능도 우리가 당초에 우려했던 것을 말끔히 씻을 수 있도록 대단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이 전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朴世煥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韓英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국방현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방위원회가 백두사업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하면

국방부 당국자 여러분이나 국방위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15대 국회 국방위원회를 마치면서 위원 여러분에게 주문도 하고 우리 국방부 군 당국자 여러분에게도 제가 주문의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나라에서의 안보 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군 당국자 여러분은 이와 같이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어떻게 정신전력을 유지하느냐, 군의 기본적인 자세를 유지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변화가 오든 우리 국민이, 우리 국가가 군 여러분에게 기대를 거는 것은 대단히 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방위력 증강 사업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도 국민이 군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신뢰를 높여야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더라도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파괴된다고 하면 그 군은 전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평소의 제 소신입니다.

그러니까 여야 위원 여러분들 중 16대 국회에 참여하시는 분은 참여하시는 대로 군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해서 우리 군이 외롭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사랑하고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방부나 군 당국자들은 여기에 못지 않게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최대한도로 유지시키면서 우리의 방위력 증강사업에 또 전투력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국방부 차관 이하 군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7분 산회)

○出席委員

韓英洙 許大梵 金 惠 朴世煥
徐清源 李信範 鄭在文 河璟根
河舜鳳 張永達 權正達 金令培
安東善 林福鎮 李東馥 金宗鎬

○出席專門委員 및 立法審議官

專 門 委 員 金 大 勳
立 法 審 議 官 權 大 秀

○委員 아닌 出席委員

李揆澤

○出席政府委員

國 防 部

次 官 朴 庸 玉
企劃管理室長 文 東 明
獲得室長 文 一 燮
政策企劃局長 車 榮 九
人事福祉局長 金 承 烈
軍事施設局長 申 澤 均

○政府側參席者

國 防 部

企劃調整官 申 珍 祐
監 查 官 吳 重 權
法務管理官 金 鎮 燮
軍備統制官 金 國 憲
軍需管理官 異 光 吉
事業管理官 俞 炳 九
白頭事業團長 梁 致 奎

合同參謀本部

軍事情報部長 朴 勝 椿
戰發保安部長 朴 春 淳
情報參謀本部長 洪 淳 昊
作戰企劃部長 安 秉 漢

調達本部

調達管理部長 李 賢 根

【報告事項】

○常任委員辭任 및 補任

委員名	辭任委員會	補任委員會	交渉團體
金復東	農林海洋水産	國 防	자유민주연합
朴泰俊	國 防	農林海洋水産	

(1월14일자)

委員名	辭任委員會	補任委員會	交渉團體
黃珞周	國 防	統一外交通商	한나라당
李信範	統一外交通商	國 防	

(5월16일자)

○交渉團體所屬議員除籍

한나라당

李漢東

(12월29일자)

○交渉團體加入

자유민주연합

李漢東

(1월11일자)

○交渉團體所屬議員除籍

새천년민주당

金相賢

(2월28일자)

○關員通知

한나라당

金復東

(4월19일자)

○請願回附

육군헬기추락사고원인재조사에관한청원

(1999년12월23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현대아파트 106-201 임성창으로부터 趙誠俊議
員외 4인의 소개로 제출)

12월23일자 회부됨